



하노이 담판 결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베트남의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지난 2월 27-28일 열린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회담 직후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No agreement was reached at this time)”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담에 대해 스몰딜(small deal)이나, 빅딜(big deal)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말들이 무성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no deal)을 택한 것이다.



北, 미국 능력을 과소평가 했다

낙관 김정은·트럼프 결국 빈손...‘빅딜’ 하려다 ‘노딜’

세계 언론, 최대 敗者는 文대통령 김정은, 존엄의 위상 타격 불가피

협상의 금언(maxim)에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이란 말이 있다. 우리말로 옮기면 문자 그대로 “나쁜 거래(계약, 협상)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다.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서명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바라던 부분의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외에 추가로 큰 핵시설이 있음을 언급하며 “영변+α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발견한 곳이 우라늄 농축시설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특히 트럼프가 이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영변 핵단지 외의 다른 지역에 핵시설을 숨겨두고 있다는 주장들은 많았으나 이는 주로 싱크탱크나 안보 및 국방정보기관 차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은 물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 우리가 합의를 못

했다. (핵)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영변 외에 북한이 숨겨둔 제2, 제3 핵시설이 미북정상회담의 복병으로 등장한 것이다.

우선 지난해 공개된 평안남도 천리마군의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영변 외 핵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는 싱가포르 미북회담 후인 지난해 7월 10일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 외에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지하에 비밀리에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ISIS 소장은 “강선이 영변보다 먼저



서옥식

본회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지난해 11월 22일 김정은 위원장이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영구 폐기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 핵 단지에서 원자로 부품 조립 등 분주한 핵 활동이 관찰됐으며 실태파악을 위한 방북 사찰이 필요하다고 IAEA 이사회에 건의했을 정도다.

또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역시 지난해 11월 12일 “북한에 약 20곳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이 미북간, 남북간 핵·미사일 폐기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은폐된 핵시설을 들춰내며 회담 결렬에 결정적인

노동력 송출 차단을 풀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5건은 사실상 유엔 제재 전부나 다름없는 99%에 해당하는 것이다.

세계의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최대의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 최대의 패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꼽았다. 미국의 경제뉴스 전문방송인 CNBC는 “한국이 실패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최대 패자”, 홍콩의 유력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지의 전 서울주재특파원으로 한국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커크의 기고문에서 “실패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최대 패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워싱턴타임스는 가장 명백한 패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 미국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미 정치권력 3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칭찬했다. 특히 10년 지기

‘이제 모두가 역사의 무기를 없애는데 노력해야 할 때’

건설됐으며 2000-4000개 원심분리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9·19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열리고 있을 순간에도 핵물질 추가 생산 등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처는

‘기여’를 한 사람은 대북 매파로 통하는 불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회담 결렬이라는 예상외의 ‘벼락’을 맞은 북한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예정에도 없던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요구한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유엔 제재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즉 북한산 석탄·섬유·수산물 등의 해외 수출 금지, 북에 유입되는 유류(油類) 제한, ‘달러 박스’인 해외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 의한 섹스 스캔들 폭로로 회담기간 내내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로서는 ‘노딜’ 하나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자신의 추문보도가 사라지는 반사이익까지 챙겼다.

이번 회담에서는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말이 가짜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美北 핵 협상과 한미동맹의 미래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쩔 텐가



염동재

전 국정원 1차장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속임수를 눈치 채기 시작한 건가? 이유야 어쨌든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덜컥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감축 등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反美감정 등 한국민 태도가 한·미동맹에 영향 미칠 것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미 양측이 모두 우리 안보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매우 경솔하게 취급해 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협의 없이 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계획과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일방적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유엔사의 존립과 주한미군 지위와 우리 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북한남침 격퇴를 위해 설치됐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는 존립근거를 잃게 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 유엔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엔사는 현재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는 병력공급자(force provider)의 역할이다. 북한의 남침 시 유엔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 깃발 아래

즉각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병력 증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유엔사는 1953년 일본정부와 체결한 SOFA 협정에 따라 일본 내 7개 미군 기지를 다국적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후방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비무장지대(DMZ)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북한의 남침은 유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넷째,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유엔사령관이 설정한 것이어서 유엔사 해체 시 북한이 NLL 무효화를 주장할 근거가 된다.

유엔사 존속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사항이어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고위 관리들도 종전선언 후 유엔사 해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은 유엔사 해체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종전선언이 곧바로 우리 안보체제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

많은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즉, ①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높고, ②주둔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③평택기지가 해외 최고의 현대식 기지이고, ④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고, ⑤동북아 안정과 일본 안보에 중요하고, ⑥미국 무기 수출의 9%를 차지해 미국 군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문제이므로 평화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도 적대시 정책만 않는다면 미군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엘 위트 38노스 대표처럼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미·중간의 힘의

것 같다. 동맹도 ①위협상황이나 위협인식의 변화, ②신뢰도의 변화, ③비용부담의 불균형, ④이념, 정치세력, 지지도의 변화에 따라 쇠퇴하기 때문이다.

특히 ①미어 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패권정책(Liberal Hegemony)이 미국의 자산만 낭비했으므로 이전 선별적 개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냉전시대와는 달라 주일미군 보강을 통해 대체할 수 있고, ③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걸쳐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주한)병력을 빼내고 싶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공언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검토 지시를 한 바 있고, ④트럼프가 이미 시리아 및 아프간 주둔 미군철수를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미국은 1973년 월남 주둔군 및 1992년 필리핀 기지 철수 시 보여준 것처럼 민족·자주 의식과 반

안보와 동맹을 허술하게 하다가 트럼프로부터 즉흥적 치명타 맞을 수도

균형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특히 ①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초강대국으로 우리에게 최선의 동맹 파트너이고, ②확장억지 외에도 주한미군 장비 가치가 17-31조 원, 전시지원전력 가치가 120조 원, 미군철수 시 국방비 2배 증액과 GDP 성장률 1.2% 하락이 예상되어 경제적 가치가 크고, ③주한미군의 전략자산과 정보자산은 대체 불가능하고, ④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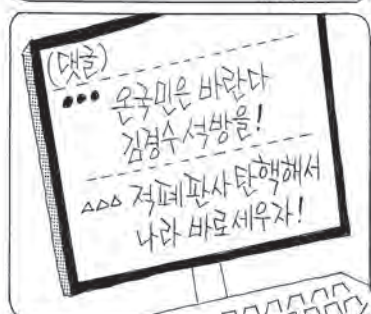
그러나 사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미감정 여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해주는 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막대한 돈을 써가며 세계경찰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어 미국 및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태도가 차후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가 해 온 일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정부로부터 우호적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전의 은인 맥아더 장군 동상 훼손에도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 장갑차 훈련 중 여중생 교통사고와 발생한 적 없는 광우병을 이유로 몇 년 동안 반미시위를

오늘의 나대로

이홍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특임교수)



하는 국민들, 반미세력의 사드 포대 진입로 차단을 몇 년간 방치해 음료마저 헬리콥터로 나르게 하는 정부, 중국의 압박이 두려워 우방을 버리고 3불 정책으로 굴복하는 나라, 관함식에 참여한 우방국 항공모함의 접근도 못하게 놔두는 나라, 국방장관이 연합사를 주권침해라고 떠드는 나라, 실업자 구제에 53조 원을 쓰면서 2,000억 원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끝내 결렬시키는 나라, 동맹국 기지를 포위하고 동맹국 군인을 폭행해도 경찰이 방치하는 나라, 김정은 화형식 했다고 현역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면서도 우방국 대통령 화형식은 모른 채하는 경찰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 미국정부가 돈을 쓰고 미국 젊은이가 피를 흘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

정부는 사과하라 ‘북한 비핵화 의지’ 거짓말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미몽(迷夢) 속을 헤매는 한국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노이 선언의 불발로 좋은 딜(합의)이든 나쁜 딜이든 성사만 되면 대북지원의 물꼬를 트려고 버르던 정부와 이에 부응하여 축포를 준비 중이던 일부 언론은 당혹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솔하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해치는 합의를 할 수 있음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대우

대남 목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를 노리는 거짓 정책

‘노딜’에 안도하는 사람들

회담 전부터 전문가들은 ‘빅딜(큰 합의),’ ‘스몰딜(부분적 합의),’ ‘마이크로딜(미미한 합의),’ ‘노딜(합의 부재)’ 등으로 결과를 예상했는데, 유력하게 점쳐진 것이 ‘스몰딜’이었다. 북한이 쉽게 핵포기를 결단할 리가 없다는 이유로 ‘빅딜’은 일찌감치 제외되었고, 두 정상 모두가 빈손 귀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마이크로딜’과 ‘노딜’도 제외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려했던 것은 ‘나쁜 스몰딜’이었다.

‘나쁜 스몰딜’이란 북한이 상당 부분의 핵능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와 함께 한미 동맹을 이완시킬 단초들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에 하노이에서 북한은 정확하게 이런 시도를 했다. 북한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핵 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일부 시설 해체 등의 기존 조치들에 ‘영변 핵시설 포기’만을 엮는 선에서 사실상의 ‘전면적’ 제재 해제와 함께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교환 등을 받아내려 했다. 트럼프가 이를 수용했다라면 북한은 영변 이외에 산재하는 수십 군데의 핵시설, 미 정보기관들이 최대

65개로 추정하는 핵무기, 숫자 미상의 농축시설, 20여 곳이 넘는 미사일 발사장, 수백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우라늄 광산, 정련시설 등을 고스란히 유지하게 될 판이었다. 북한이 영변 이외에 있는 농축시설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우라늄탄 제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런 가운데 종전선언까지 합의되었다면 크게 고무된 한국의 좌파들은 평화의 환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열광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해, 종전선언은 성급한 평화의 환상, 한국사회의 좌우 대결 심화, 동맹해체, 안보의식 붕괴 등으로 가는 출입구로서 결국 연방제 통일과 적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좌성

향 인사들이 종전선언을 쉽게 내주어도 무방한 카드로 생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던 중이었다.

정확하게 말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남한과 체제대결을 벌일 필요가 없는 나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며, 북핵 폐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한 ‘사실상의 전면적 제재 해제’를 거부하고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도 필요하다는 ‘영변+알파’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북한의 시도는 좌초되었다. 한국 정부는 하노이 선언의 불발을 아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빈손 귀국’에 대해 공화당-민주당을 막론한 다수의 미 의원들과 조야의 전문가들이 “차라리 잘했다”며 박수를 친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 ‘나쁜 스몰딜’ 거부하게 만든 ‘두 번째 미국’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로 ‘조선반도 비핵화’의 골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충언에 귀를 막은 채 평양을 향한 ‘외길 달리기’를 고집해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두절미하여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고, 거기에 더하여 스스로 군사역량을 줄이는 자해적(自害的)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유사시 군의 대응역량을 제약하는 군사합의에도 서명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타협할 움직임을 보이자 “동맹공조는 공고하다”는 말도 해왔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다. 사실 미국 내에는 두 개의 미국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 행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경솔한 대북 및 동맹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의 동맹이간 술책을 경고하고,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의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의회, 전문가 집단 그리고 여론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눈앞의 금전적 이익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는 트럼프하고만 입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 보라, 미국도 우리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해서

동안 했느니, 사각 테이블이 아닌 원탁에서 식사를 했느니, 김여정이 김영철의 어깨를 밀쳤느니 하는 자질구레한 현장중계에 과도한 시간과 의미를 할애했다.

이렇듯 방송이 ‘김정은 띄워주기’에 매달리는 동안, 정책, 전략, 국익 향배 등 국민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실종되었다. 언론이 우민화(愚民化) 정책에 앞장선다는 느낌이 들었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금할 수 없었다.

대북·북핵·동맹정책 반추하는 계기 앞으로도 남북대화와 상생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만으로는 그런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대북기조, 북핵 정책, 안보정책 등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대북 지원에만 속도를 내려고 안달한 것이 바람직했는지, 북한 비핵화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의 국방역량을 감축하고 국가정체성을 허물려 한 일련의 정책시도들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 미국 주류(主流)의 여론을 무시한 채 트럼프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과연 멀리 내다보는 동맹정책인지 등을 되짚어 봐야 한다.

모든 것에 앞서, 정부는 북한이 핵능력의 일부만을 내어주는

동맹국 협력 강화 촉구 의회·전문가 집단과 여론이 트럼프 견제

의 한반도 이탈’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과 온 세계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의 차이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북한에 놀아나게 된다는 경고를 지겹도록 발해왔다. 처음부터 북한이 두 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도 경고해왔다. 즉, 첫 단계에서는 핵능력의 일부만을 포기하는 가짜 비핵화(half-baked denuclearization)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종전선언 등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단초들을 얻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핵 지렛대를 계속 사용하여 70년 숙원사업이자 최대의 대남전략 목표인 ‘미국의 한반도 이탈’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숙원사업이 성취되지 않는 한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 바

는 안 되는 일이다.

한국의 방송언론들도 자성해야 한다. 이번 회담의 핵심적 관심사는 당연히 어느 수준의 합의로 얼마만큼의 북한 비핵화가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만, 북핵 문제가 많은 유관국이 있는 국제적 이슈이고 한국의 국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들이 있었다.

합의별 북한 비핵화 전망, 잔존할 북한 핵능력 분석과 한국의 안보과제, 미 의회 동향과 향후 동맹공조, 주변국의 역할 등 언론이 마땅히 다루어야 할 고난도 화두들이 수도룩했다. 그러나 방송은 이런 논의를 거의 외면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서 담배를 피웠느니, 김여정이 재떨이를 들고 수행했느니, 악수를 몇 초

‘살라미’ 협상전술을 통해 동맹 이간, 미군 철수 등을 노릴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붙들고 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충정어린 경고에 귀를 막은 채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을 속여 온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거짓말을 주도한 인사에게는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북한과 대화하되 안보와 정체성은 확고하게 지킨다”는 대북정책의 정론을 준수해야 하며, 북한의 속내를 미화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면서 장기 협상 전에 대비해야 한다. 하노이의 선언의 불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안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위의 집권당’ 판결판사 적폐몰이 나서

‘김경수 구하기’ 법정 밖 난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 정권의 실세가 법정 구속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당연히 자제하고 조용히 법원의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조용히 기다리기는커녕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을 한 판사를 적폐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여당은 지난 19대 대선승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김경수 구하기’에 총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위의 집권당’이란 일부 언론의 비판도 받았다.



김광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판결문 분석 법원 압박, 2심 3심 악영향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구속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수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성장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근, 사법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성 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근무를 했기 때문에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이다. 너무 무리하게 꺾맞춘 감이 든다.

여당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는 외부인사인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16대 총선 때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남 창원구에 출마)와 김용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 출신)에게 1심 판결문 분석을 맡겼다. 이 두 사람은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지사의 댓글조작 지시, 승인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증언, 동영상, 녹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여당은 유튜브 생중계로 ‘김경수 판결문 읽어봅시다’라는 ‘대국민 토크쇼’도 여는 등 전 방위적인 ‘김경수 구하기’ 홍보쇼를 벌였다. 조선일보가 ‘민주당 김경수 판결불복(기자)회견, 이성을 잃었다’는 사설을 게재할 정도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조작을 몰랐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감히...” “망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왜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며 “탄핵 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하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청에서 지역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남도청 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152곳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이미 특검까지 마친 상태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했다. 가히 여권의 전 방위적 엄호작전이다.

선고 판사에 대한 이러한 권력층의 집단적 위협은 앞으로 2심, 3심 판결에서 독립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적폐’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사법판결 불복이자 삼권분립 훼손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대통령도 대선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야당 일부에서는 “대선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 지사)다음은 없을 것

용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간의 메시지 내용을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 문건”이라고 보고했다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말했다.

김 지사 판결을 둘러싼 이 같은 공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판결에 대한 비판의) 표현이 과도하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판결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여권 측의 비난을 일부 허용했다.

이번에 밝혀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는 어마어마하다. 무려 473일간에 걸쳐 8840만회에 달하는 댓글 조작을 했다. 베스트 댓글과 순공감, 비공감 글, 최신 글 등의 순위조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근 영국 노동당의 30대 여성 국회의원 피오나 오나산야가 구속됐다. 그녀의 혐의는 ‘거짓말’이었다. 오나산야는 2017년 과속으로 딱지를 받았다. 시속 30마일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서 41마일로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나산야는 “내가 운전하지 않고 남동생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오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1월 말 법원은 “그녀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예수그리스도에 비유하며 “억울하다”고 했다.

오나산야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그녀를 옹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국민들 뿐 아니라 정치권, 특히 그녀가 소속된 노동당은 더욱 냉정했다. 노동당은 곧바로 오나산야를 출당시켰다. 노동당은 그녀가 출옥 후 다시 의회로 복귀하겠다고 하자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의회를 떠나라”며 당장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녀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노동당은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사임하지 않는다면 오나산야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주 민소환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일반인과 비교하면 오나산야의 3개월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했다.

총선 당시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은 그녀를 “전도유망한 젊은 일꾼”이라며 총력 지원해 당선시켰다. 그녀 스스로도 “영국 최초의 유색인 총리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당은 그녀를 감싸주지 않고 한 때 그녀를 지지했던 점을 사과했다.(이상 조선일보 김아진 런던 특파원 리포트 참조) 우리였으면 어땠을까. 당 대표가 추천, 지원한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이 ‘고작 과속에 대한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정도로 당에서 이렇게 매정하게 떼어버릴 수 있을까. 김경수 지사 사건과 손혜원 의원 사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조작을 몰랐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감히...” “망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 다음은 없는 것이냐’ 논란도 후속 돌풍예고

이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에 관련된 것을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 25일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이 텔레그램(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단체방에 저를 포함한 특감반원 4명 앞으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말하고, 그 기사는 드루킹이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이 특감반장이 “이거(보도내용)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모 특감반원이 이 지시대로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자료내

작, 또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 접기(숨기기) 등의 조작을 했다. 신문기사의 경우 8만1000개에 달린 댓글을 조작했다. 지난 정권의 국정원 댓글 클릭 조작 41만회에 비해 220배의 댓글 조작을 한 셈이다. 국정원 댓글은 조작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이트 위주였는데 드루킹 댓글 조작은 과급력이 훨씬 큰 네이버 등 포털사이드에서 행해졌다.

이번 법원판결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대선여론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어쩌다 이 지경!...손석희·손혜원의 막장 드라마 公人 통감 ‘진퇴’ 결단하라

손석희 JTBC 대표와 손혜원 국회의원, 최근 두 손(孫)씨 사태를 두고 진실 공방이 뜨겁다. 혼돈? 이전투구? 언론이나 상대방이 한 건 터뜨리면 본인들이 곧바로 부인(否認)과 맞고소로 대응한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누가 뭐래도 사실(Fact)은 분명 하나일 텐데 ‘진실’은 사라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만 끝없이 남는다.



심의표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해설위원

진실 사라지고 꼬리무는 의혹만 난무

이 두 사태가 쏟아낸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거의 막장 수준이다. 폭행, 비밀녹취, 뺑소니, 불륜, 회유, 협박, 배임, 부동산투기, 차명매입, 직권남용...등등 마치 범죄 영화나 드라마 대사를 보는 것 같다. 그 뿐이 아니다. “고소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직위 모두를 걸고...(중략)...고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다. “목숨과 의원직도 걸겠다.”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가겠다는 건가.

문제는 이 두 사태에 연루된 주인공(?)이 모두 유명 공인(公人)이라는 점이 우리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한다. 한 사람은 유명 언론기관의 대표이자 뉴스 앵커, 또 한 사람은 최근까지 집권 여당 소속의 어엿한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다. 평범한 시민을 둘러싸고 이런 말들이 오가도 누구나 손가락질 할 텐데 어떻게 우리 사회의 대표적 유명 공인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손석희, 그는 누구인가? 지난 1985년 MBC ‘현장85 여기’ 앵커를 시작으로 아침뉴스, 뉴스 센터, 뉴스 투데이, 미디어 비평 등 MBC의 다양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합무진, 빛나는 방송역량을 발휘

한다. 한마디로 방송저널리스트계의 스타 중의 스타였다. 그뿐인가! 성균관대와 연세대, 성신여대 등 대학 강단에서도 방송강의를 맡아 미래의 방송 지망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으기도 했다. 2013년, JTBC 보도담당 사장직으로 옮겨 가면서 또 한 차례 화려한 도약에 성공한 손씨는 JTBC 뉴스 9·뉴스룸 앵커를 맡아 명실공히 대한민국 방송 뉴스 부문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거머쥔 뉴스 권력자의 위치를 굳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손씨는 한국 방송계의 유명 언론인으로서의 공인(公人)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손 앵커의 독특한 방송 패턴인 이른바 ‘공격형 저널리즘’이 자리 잡아가면서 수많은



손석희

공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는 뭐니 뭐니 해도 ‘정직성’이다. 본인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나 의심이 쏟아지면 공인은 먼저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손 대표는 일단 앵커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올바른 자세

고위 공직자와 기업경영인들이 그의 방송 비평 칼날에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다. 일일이 모두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 사건, 전직 대통령 탄핵의 촉발제가 된 이른바 최순실씨 국정농단 폭로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런 손 씨가 이번에는 본인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과 의혹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과역관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지난 2017년 4월, 과천 한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접촉 사고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여기서 되풀이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손씨의 대응자세와 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공인



손혜원

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난 이후 그 때 가서 방송 복귀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공인으로서의 당연하고 올바른 자세다.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1972년 현대양행 근무를 시작으로 크로스포인트 대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사, 한국 나전칠기박물관장 등을 맡아오면서 그가 한국 디자인, 광고·홍보 부문 등에 남긴 발자취는 과히 경탄할 만하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직을 거쳐 제20대 서울 마포구 을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그의 예술적 역량과 함께 돋보이는 정치적 수완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 그도 공인(公人)임에 틀림없다. 손 의원 역시 손 앵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목포 구도심 재생 사업 건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거센 회오리의 중심 눈이 되고 말았다. 또한 6번이나 탈락한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손 의원에 대해서도 그에게 얹혀 있는 각종 논란과 비난을 곱씹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그의 대응태도는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차명 매입여부를 놓고 남동생과 싸우는 모습은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손 의원의 인격과 사회생활을 보는 것 같아 재미보다는 슬프기까지 하다. 앞치락 뒤치락, 우리 사회 대표적인 공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이래서는 안 된다.

공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늘어놓자면 수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공인으로서 본인이 내려야 할 진퇴(進退) 여부를 결정하는 용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퇴 중에서 퇴진(退陣)은 더욱 그렇다. 특히 퇴진의 시점과 퇴진 시 공인이 내보이는 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다.

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는 뭐니 뭐니 해도 ‘정직성’이다. 본인의 행적에 대해 의혹이나 의심이 쏟아지면 공인은 먼저 본인의 입장과 상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시종일관 애매하고 불분명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얼버무려 온 손씨는 수많은 그의 애호,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신뢰가 시작이고 끝’이라 할 수 있는 뉴스앵커 직(職)·간 이야기가 필요 없이 손씨는 공공의 재산인 방송의 현장에서 일단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검·경의 조사와 기소 여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판 과정을 거쳐 사

**긴급
진단****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경기 빙하기’로****참혹한 ‘소득주도성장’ 고집**

한국경제가 사상 최악의 ‘경기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55개 경제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을 ‘F학점’으로 평가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주제가 되고 실증분석을 통해 낙제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학회는 지난 2월 14일 1500명의 내외 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용, 소비, 총수요 등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 학회는 소득주도 정책을 통해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택만**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55개 경제학회, 현정부 성적 ‘F학점’ 평가

국제경제기구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엄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21개월 연속 내리막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상 최대로 긴 하락세다. 2월 12일 발표한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CLI는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내렸다.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12일 발표한 ‘2019년 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 시장은 이미 흑한기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8년 12월 및 연간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82만 2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9만 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8만 7000명 감소 이후 최저치다. 2017년 취업자 증가 폭(31만 7000명)과 비교하면 3분 1로 급전직하한 셈이다. 올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작년보다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 8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이 질도 나빠지고 있다.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폐업 속출

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늘리는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늘어난 17만 7000명은 대부분 세금으로 늘린 것이다. 작년 증가한 9만 7000명도 사실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를 제외하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폐업해 사상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자영업으로 시작한 가계들의 존속기간은 평균 3년이다. 3년 이내 폐업이 50%이고 5년 이상 살아남는 자영업은 30%에 불과하다.

최근 2년간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광화문 길거리에 나서 올부짓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수는 564만 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다.

취업 시장이 흑한기를 맞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대기업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오폭과 민주노총의 파업과 임금인상 요구에 시달리자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엑소더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로 폭증한 반면 국내 생산능력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과 자동차·화학제품 등 주력 제조업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생산 기반은 붕괴하고 있는 것

국 중국 일본의 협공과 추월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투자·고용이 동반 위축되면서 성장 동력의 역할을 상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19년 2월 20일 발표한 ‘2018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 9000대를 기록했다.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다 뒤쳐졌던 멕시코가 같은 기간 411만대를 기록, 전년보다 1.0% 증가해 한국을 따돌렸다. 한국자동차 산업위기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 상실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또 다른 간판격인 LCD(액정 디스플레이) TV도 중국에 처음 추월을 당해 1위를 빼앗겼다. LCD 패넬에 이어 LCD TV까지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LCD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과 과 때 때문이다.

자영업자 폐업속출…대기업은 해외로 속속 엑소더스**반도체 너마저 위기**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의해서 협공을 당하고 있다. 초호황이 끝나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 미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한국 반도체 패권 견제’에 나서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월 1일자 신문 톱으로 실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월 14일(현지 시각)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향후 6년간 2000억 달러(약 225조원) 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규모의 3배를 넘는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2017년 2601억 달러였고 작년엔 299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반도체 시

장 규모의 절반 이상이다. 중국이 인위적으로 수입 물량을 미국 기업에 배정하면, 그만큼 한국 반도체 수출은 위축된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이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물질 중 하나인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린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금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용 불화수소 시장은 일본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우뚹 섬)도 위협 요소다. 중국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는 40조원 이상을 투자하더니, 작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Total Crisis)는 경제 전문가가 총동원해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경제정책을 일대 전환해야 한다.

모든 경제정책에서 이념적 측면이나 정치적 색채를 배제해야 한다.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선심 공세와 예비 타당성 검사 없이 시행하려는 남부내륙철도와 새만금국제공항 등 23개 대형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기업 지배력 문제 역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본질상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

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선진국처럼 업종과 지역,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양하게 차별화해야 한다. 숙박, 음식업의 중위임금이 제조업의 절반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영세업종에서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다.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우선은 일자리가 늘어날지는 모르나 고용 생태계가 교란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는 원천인 기업의 규제를 혁파하고 강성노조의 폐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빙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현명한 선택이 있길 간곡히 당부한다.

여권 지지율 하락, 적폐세력 준동 탓인가

‘민심은 天心’ 자충수 두지마라



장석영
본회 부회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구(警句)로 사용된다. 그런데 백성의 마음은 바다의 물과 같아서 배를 띄워 항해할 수 있게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정부 여당 인기추락은 반기업 반시장 경제파탄 때문

얼마 전 한 조찬모임에서 여권 국회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지지도 폭이 크게 좁혀진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지지도 하락 현상은 ‘적폐세력’들의 반격 때문이라고 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오로지 남 탓이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되나보다. 민심이 천심인데 말이다.

그들은 지지율 하락 현상이 비교적 정확히 나온 것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면 그 여론조사 자체를 못 믿겠다는 투였다. 믿고 싶은 말만 믿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6개월 전에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현실화 된 것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곧 반등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한국당과의 격차가 9% 선까지 접근했지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모든 게 일시에 원상회복 될 터이니 두고 보라며 자신했다. 사실상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타고 한때 30%까지 근접했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당 소속 의원들의 ‘5·18평화’ 논란 등이 이어지며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다.(2.11~13일 리얼미터 조사)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이래 한동안은 80%를 넘었던 것은 사실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이벤트성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탄핵정국에 취했던 국민들의 혼을 빼앗아 갔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갖가지 정책실패와 정부 여당 내에서 발생하는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은 주간 단위로 펼쳐지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확연히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의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가 34.8%로 역대 최

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못하고 있다’는 40.9%로 잘하고 있다는 비율보다 6.1%나 높았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계속 하락해 30%대로 떨어진 모양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7.8%이었다. 반면에 한국당의 지지율은 29.17%로 나타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좁혀졌다고 한다.

정부 여당의 인기 추락은 경제파탄이 큰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문 정권 출범 후 1년 반 동안의 경제운용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투자, 생산,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다음으로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한 안보 때문이다. 남·북 회담에 기대해 봤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미·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렸지만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은 우려스럽기만 하고, 북한 핵의 폐기는 시작도 아니 했는데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으니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폭로와 청와대의 적자국채발행 압력의혹이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에 의해 폭로되면서 정부 여당의 신뢰는 한 층 더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터진 사건이 민주당

여권에 유리하면 ‘정의’라고 하다가 불리하면 ‘적폐’로 몰아붙이는 ‘권력을 이용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도를 넘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만 살 수밖에 없었다.

불안한 안보·재판 불복·측근실세 실언 등 악재 누적

유례 드문 일이 벌어졌다. 일자리 사정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치닫고, 소득 양극화는 도리어 심화됐다.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자영업과 서민경제는 식었다.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소득주도’ 실험을 해온 정부의 정책 역수행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각종 통계가 입증한다.

지나친 친(親) 노동 편향 정책과 대기업을 ‘적폐’로 보는 반(反) 기업, 반(反)시장 기조라든가, 포퓰리즘 정책은 기업의 활력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 경제가 잘 될 리가 없다. 맹자도 말했지만 무항산이면 무항심(無恒産而無恒心)이라고 했다. 먹고 사는 게 해결 안 되면 국민들은 못 견딘다.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아야 하지만 국민은 먹고사는 걸 하늘로 삼는다. 당장 먹고 살기가 전보다 더 팍팍해 졌는데 어느 누가 국정을 잘 수행한다고 말할겠는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의혹’과 같은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의혹’ 사건이다. 서 의원은 지인의 아들인 이 모씨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을 법원에 청탁해 공연음란죄로 선고 받게 한 의혹을 받았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해 투기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악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과 그에 따른 여당의 계속되는 자충수일 것이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김경수 재판 불복’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재판 불복’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당내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연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해왔다.

급기야는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잇달아 열고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개’라거나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며 사법부를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작태는 여권에 유리하면 ‘정의’라고 하다가 불리하면 ‘적폐’로 몰아붙이는 ‘권력을 이용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당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도를 넘는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만 살 수밖에 없었다.

김 지사의 댓글 의혹만 해도 민주당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인데 1심 판결 이후 여당의 태도는 마치 불나방을 보는 것만 같아 안쓰럽기까지 했다.

과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장 ‘대선불복’이란 말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화살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 구속된 것도 정부 여

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 여당의 지지율 급락에 기여한 것은 너무나 많다. 한마디로 차고도 넘치는 셈이다. 김현철 전 청와대 보좌관의 ‘동남아 발원’을 비롯해 국회 동의 없이 조해주 중앙선거위원을 임명한 것이라든가, 문대해씨의 해외 이주문제,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의 공시가격 대폭 인상 등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일도 지지율 추락에 한몫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여당 정치인들의 실언(失言)도 빼놓을 수 없다.

주역(周易)의 마지막 괘(卦)는 항용유회(亢龍有悔)다.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그리고 스스로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즉 이 말은 국가 경영을 책임진 이들은 민심에 겸손 하라는 뜻이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 절대 왕조에서도 곱씹던 경구(警句)이다.

**세
밀
분
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 2년...절차 공정했나

지금도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는가



채명성
변호사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당시부터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40표를 모으면서 탄핵소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적 뒷거래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고, 정파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국회의 엉성한 탄핵소추안 재정리 성의까지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한 인적청산은 국정원, 군, 검찰, 언론에 이어 법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와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에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사망했다. 이념 대립은 이전보다 더욱 격화되었다. 이 모든 일들이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물어보고 싶다. 2016년 겨울 왜 그렇게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과연 지금도 대통령을 탄핵시킬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대통령이 사고에 빠진 최서원의 아바타라는 분노와 실망감,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섹스나 하고 국판을 벌이는 더러운 여자였다는 충격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나. 그 모두가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되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

년 8월 중순부터 조응천, 손

혜원, 도종환 의원 등과 비공개로 '최순실 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주 '처음처럼'을 네이밍한 광고전문가 손혜원 의원과 '접시꽃 당신'을 쓴 시인 도종환 의원이 TF 주요 멤버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박정자 교수는 이를 두고 '섹스와 샤머니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지탱된 기획에 '기획자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고도의 내러티브까지 포함시킨 기획자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손혜원 의원의 자신만만함은 이 정권을 근원에서부터 만든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여기에 드루킹의 댓글공작까지 가세한 것이다.

'최순실 TF'의 활약 때문이었는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까지 몇 달간 언론에서는 온통 검증되

지 않은 오보들을 쏟아냈고 어느 순간 누구도 대통령이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다. JTBC조차 첫 보도 시에는 '태블릿 PC'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컴퓨터 파일'이라 얼버무린, 검찰이 최서원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오랜 기간 최서원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태블릿 PC였다.

국회는 어떠한 조사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참고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였다. 심지어 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이어진 절차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 이를 열람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었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개의치 않았다. 검찰이 수개월간 공들여 작성한 조서들을 읽는 순간 강력한 예단이 형

의를 보였다. 충격적이지만 첫 변론 준비기일에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13개 소추사유를 5개로 재정리해 직접 불러주었다. 이후에도 국회 소추위원단에 소추사유를 재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소추사유는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을 제외한 4개로 정리되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던 것이다. 재판관들 사이에 '뇌물죄 등 형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었고 헌법위반 사유만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정리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에서는 헌법재판관들과, 밖에서는 특검과 싸우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특검은 대통령을 안중법, 최서원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결과를 매일같이 언론에 브리핑했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확정된 사실인양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야당 지도자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고 '탄핵이



와대는 2017년 7월 14일 300여종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했고 이를 법정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루 앞둔 2017년 10월 12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세월호 사고일지 조작 브리핑을 했다. 마치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다'라고 부르짖는 듯했다. 다음 날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렇게 거짓은 산처럼 쌓여갔다.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재판을 거부했고 변호인은 총사퇴했다. 대통령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심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서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최서원 및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였지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1원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밝혀졌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은 '목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차마 검찰과 특검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징역 33년형이었다.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아닌가' 牽強附會 논쟁도

성되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에는 이를 반박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태블릿 PC 감정보고서에 대한 송부촉탁 신청을 기각하였고, 김수현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신청 역시 기각했다. 법상 180일간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선고기한을 3월 13일로 못 박고 재판을 진행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를 기회로 불출석했고, 헌법재판소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다시 부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고영태는 특검과는 은밀히 소통했고, 형사법정에도 출석했지만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승일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고영태의 소재를 알고 있다. 어제는 저녁도 같이 먹었다'고 했지만 고영태를 불러낼 수 없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엉성한 탄핵소추안을 재정리해주는 성

아니면 혁명밖에 없다'며 국민들을 선동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헌법수호의지 결여' 등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놀랍게도 통진당 해산 당시에도 없었던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탄핵 이후의 과정은 더 일방적이었다. 사인으로 돌아간 대통령은 11일 뒤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구속되었다. 도주할 염려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었지만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에는 '주4회 재판'이라는 초유의 강행군을 강요받았다. 기록은 12만 페이지를 넘어섰지만 7명에 불과한 변호인들에게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할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청와대는 불안했던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

3·1운동으로 쟁취한 조선·동아일보 항일 운동 선도



정진석
본회 명예회우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사 연구의 개척자였던 최준(崔浚) 교수는 조선일보(1920.3.5)와 동아일보(1920.4.1.)는 3·1운동이 가져온 ‘피의 쟁취물’로 규정했다. 반면에 3·1운동 후 총독 사이토(齋藤 實)가 표방한 ‘문화정치’는 식민지 통치의 새로운 출구를 찾는 회유전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 당시를 더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역사는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복잡한 원인이 중층적(重層的)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민지 치하 민간신문의 공과(功過)를 단정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3·1운동 100주년에 쓰는 이 글은 일제치하 민간신문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쳤느냐고 총독부를 비아냥거리는 투로 힐난했다. 비슷한 유형의 총독부를 향한 비판 논설은 동아일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조선·동아·시대일보 3대 민간 신문에 종사했던 인맥은 한국 현대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문은 언론인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근무처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의 역량을 펼쳐보일 수 있는 무대였다. 광복 후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인물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에는 언론인이었던 사람이 많다. 한국민주당은 동아일보 계열 인맥이 중심을 이루었다. 해방공간의 혼란기에 암살당한 거물 정치인은 4명이다. 그 가운데 김구(金九)를 제외한 3명이 일제하 언론인 출신이었다. 송진우(동아일보 사장), 장덕수(동아일보 초대 주필 부사장), 여운형(조선중앙일보 사장)이다. 이들의 피살은 언론계가 정치인들의 산실(産室)이었음을 상징한다.

셋째, 언론계는 문인에게는 안정된 직장이면서 작품의 발표무대였다. 문인 가운데 언론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조선 3대 천재로 불렸던 이광수(동아일보 편집국장, 조선일보 부사장), 최남선(시대일보 사장), 홍명희(동아일보 편집국장, 시대일보 사장)는 모두 신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도쿄의 2·8선언문을 작성한 이광수와 기미독립선언문의 집필자 최남선의 친일행적은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들도 1920년대까지는 조선을 대표하는 언론인 겸 문인으로 활동했던 사실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 향상에 기여한 언론의 역할이다. 민간 3대 신문이 창간되던 비슷한 시기에 여러 종류의 잡지가 나타나면서 민중 속에 문화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동아일보 창간의 3대 주지(主旨)는 ① 조선민중의 표현기관, ② 민주주의를 지지, ③ 문화주의의 제창이었다. ‘문화주의’가 명시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일제의 만주침략,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조선만 아니라 일본에서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 제한되고 있었다.

직접적인 항일 논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조선·동아 두 민간신문은 문자보급운동을 펼쳐서 문맹퇴치와 민족의 역량을 높이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문학,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체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운동도 신문이 앞장서서 펼쳐나갔다.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 운동의 전개였다. 문화운동은 항일 저항운동의 방편으로 전승되면서 광복 이후 문화 발달의 토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민간지 기사는 시대상 반영 역사기록

3·1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았던 1920년에 창간된 두 신문이 총독부의 엄격한 감시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항일적인 논조를 펼쳤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다. 검열 당국의 지시로 기사가 깎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지면을 흔히 볼 수 있고, 수백 건에 달하는 압수와 정간처분을 당한 기사는 총독부가 집계한 비밀 자료도 있다.

3·1운동은 민족대표 48인을 투옥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외에도 3·1운동의 계획과 조직에 가담하거나 연락한 인물들을 추가하여 48인으로 부른다. 최남선, 송진우 등이 포함된다.) 신문을 통해서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1920년대에 항일 독립운동을 확산시키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광장의 역할은 신문이 수행하였다. 민족대표 48인의 재판 상황과 뒤를 잇는 각지의 독립만세운동, 항일투쟁으로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옥중 동정을 소상하게 보도하고 동정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다.

언론탄압의 주무부서 총독부 경무국은 “형사 피고인 범죄인 또는 사형자를 구호 상휼(賞恤)하거나 또는 범죄를 선동하며 혹은 곡비(曲庇)하는 기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무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독립사상과 독립운동을 선전 고취하고 선동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는 바로 총독부의 평가였다.

동아일보는 1921년 3월 1일자에 독립운동 2주년을 맞아 옥중에 있는 민족대표의 동정을 보도하고 옥중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1924년 11월 8일자 추위가 다가오는 입동 날에 「생각나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형무소 탐방기를 실었다. 이듬해 1월 1일자에는 해가 바뀌거나 절후가 달라질 때면 옥중에 있는 동포와 해외의 형제가 간절히 생각난다면서 수감된 독립 운동가들의 근황을 소개했다. (조선일보, 1925.1.1, 「철



3·1절 기념식은 그동안 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10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조선일보 제공>

해방공간 혼란기 암살당한 정치거인 4명 중 3명이 언론인

창에도 新陽은 複照, 서대문과 경성 양 형무소의 이전 팔백 팔십 오명 옥중 동포) ‘해외의 형제들’은 망명한 독립투사들이다. 옥중에서 고통 받는 독립 운동가들을 가족, 형제의 애절한 심정으로 소개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두 신문의 친일을 파헤치고 비판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기도 했다. 공영방송 KBS가 동아·조선의 친일행적에 초점을 맞춘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 사례도 있었다. 신문은 시대상황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논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총독부가 가하는 통제의 수법과 강도에 따른 논조의 변화도 있었다. 일제시기 신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 3대 민간지는 시대상을 반영한 역사의 기록이다. 식민지 치하에서 발행된 신문이라는 사

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항일적인 경우도 많았다. 조선일보는 창간되던 바로 그 해에 1차 정간을 당했다가 속간 3일 쯤인 9월 5일자(지령 제116호)에 실린 「우열한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하고(何故)로 우리 일보(日報)를 정간시켰나/천하의 동정이 오사(吾社)에 폭주함」이라는 사실에서 총독부의 언론 탄압을 정면에서 비판했다. 창간 이래 겨우 113호를 발행하는 동안 총독부가 지면압수 23회, 발행자에 대한 계책(戒責) 10여 차례 등 날로 압박에 압박을 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일제에 아부하여 무문곡필(無文曲筆)을 휘두르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면 “3천리 강토를 점거하고 2천만 민중의 생사를 임의로 행하는 조선 총독은 일거에 우리 사의 발행권을 취소하고 기계, 재산을 압탈(押奪)하고 종업원을 주륙(誅戮)할 것이지” 어째서 겨우 1주일 정도의 정간에 그

사회주의로 가는 한국언론 바른 길인가

자유·자본주의 보도제도가 살 길



주섭일

보회 회우

전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유럽의 세계 최고 정치석학 모리스 뒤베르제 교수는 “다수의 나라들이 양제도의 공존, 즉 언론이 이념적 복수제도를 채택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정치명저 <정치사회학>에서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서술했다.

“냉전시대 자본주의 보도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언론이 양립했다. 자본주의 제도는 민간 소유의 다양한 이념을 대변했고, 사회주의 제도는 공산당 지배의 국가소유로 유일 언론기관이 지배했다. 민주진영 언론은 다원주의 언론이 공존하면 상호 시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TV라디오는 국가소유로서 민간소유 신문, 잡지 등과 상호 수정효과를 낼 경우 매스미디어의 ‘백치화’ 현상을 보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의 공존은 자유언론 덕택으로 국영 TV 매체의 타락과 독선이 저지된다...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국의 ‘타임스’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같이 독립성을 보유한 신문의 중요성이다. 르몽드는 존경받는 경영진과 편집진의 개성과 지성에 힘입어 독립의 전통과 정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타임스나 르몽드의 독립성은 견고한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 독자의 질이 신문에 특수 지위를 부여한다. 엘리트 신문은 독자의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높은 광고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엘리트 계층은 영국에서는 ‘타임스’ 프랑스에서는 ‘르몽드’의 독자이다.”

장황하게 인용한 이유는 구미 선진국 언론 제도는 냉전시대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보도양식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엘리트 중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언론이 결정적으로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 자본주의 보도 제도는 신문 잡지들이 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공정성과 진실추구를 표방한 지성지이며 TV 라디오 매체는 국가소유로 정권의 선전도구화 되어 있다는 정치석학의 냉전시대 언론이론이다.

구미 민주국가에서 좌파를 표방하는 신문은 공산당 기관지뿐이다. 공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국언론이 진실보도의 표상인 민주주의 보도 영역을 이탈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세기 초반,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언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로 분열되었다. 냉전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언론으로 대립되었다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소련 공산주의 체제 멸망으로 언론 제도가 모두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제도에 편입되었다.

요즘 서울언론은 북한보도로 넘치고 있다

산당 활동은 당 기관지만이 보도함으로 일반 신문은 보도를 하지 않는다. 중도좌파는 공산당과 적대하는 독일 등의 사회민주당, 프랑스 등의 사회당, 영국의 노동당을 지지하는 신문들이다. 프랑스의 경우, 자유주의는 르휘가로, 사민주의는 리베라시옹, 중도 르몽드, 공산당 기관지로 ‘뤼마니테’가 존재한다. 이탈리아 공산당 기관지는 ‘유니타’이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 이스베스차(일간지)와 프라우다(통신), 모스크바 방송과 같은 공산당 전체주의 선전 매체만이 존재했다. 냉전시대 공산 진영에는 모든 나라에서 공산당 기관지 유일 시스템으로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신문 잡지 통신 라디오 TV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의 단일 체제는 구소련의 사회주의 보도제도를 답습한 좋은 보기이다.

20세기 말, 냉전종식으로 모스크바의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진영으로 편입하면서 단일이념 선전 매체의 사회주의 보도제도가 소멸했다.

오늘 북한 언론은 사회주의 제도가 단일 선전 매체로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발전에 성공한 중국도 인민일보, 신화사통신, 베이징방송 등 사회주의 보도제도를 계속 따르고 있다.

선전은 다른 계급을 파괴하는 수단이다. 전체적 독재체제는 그래서 ‘사이비통합’이라고 뒤베르제는 비판했다. 자본주의 보도제도가 말로 국가에 독점되지 않고 신문잡지매체가 거의 모두 민간사기업인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기초에 입각한 언론이야말로 민주언론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언론의 총본산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문들이 주류이다. 프랑스의 르몽드와 휘가로, 영국의 타임스와 가디언, 독일의 디벨트와 슈피겔 등과 미국의 NYT, 워싱턴포스트 등이 자본주의 보도제도의 최정상에 있다. 이들은 공정성과 진실추구의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언론의 모델로 프랑스의 르몽드와 르휘가로를 필자는 중앙일보 특과원으로 취재하며 공부했다. 르몽드는 국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주필, 사장을 지낸 앙드레 폰텐, 르 휘가로는 세계적 국제정치석학이며 르휘가라고 ‘엑스프레스’지의 대기자를 겸직한 레이몽 아롱이 ‘대통령급 언론인’으로 존경받았다.

1970-80년대에 아롱과 4차례 인터뷰했고, 1977년-78년 3차례 방한 때마다 인터뷰해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견해를 보도했다. 폰텐은 1977년 중앙일보 초청으로 방한, 박정희 대통령과 회견을 주선했고, 이해 7월 그

초로 한국전쟁이 세계적 냉전의 출발점이라고 했다고 필자에게 말하기도 했다. 바로 이들이 자본주의 보도제도의 주역으로 사회주의 보도제도와 경쟁에서 승리했던 주역들이다.

국가의 제4부로서 언론은 원칙적으로 의회, 행정, 사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여론을 전달반영하며 부패비리와 직무태만을 적발해 고발하는 국가의 파수꾼이며, ‘암행어사’임으로 공정성과 진실추구가 생명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언론인의 관계 전직은 금지되거나 자제된다. 선진국 언론인의 정관계 전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르몽드의 폰텐은 1970년 대말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중국 대사 임명 권유를 받았다.

당시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화제가 되었는데, 삼고초려에도 거부했다. 그는 필자에게 “언론인은 공정성의 화신으로 지성적 직업으로서 제4부의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머슴이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연말마다 내 주인이 준 세금인 판공비와 제반경비를 절약해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은 ‘국민의 머슴인 공직자’를 감시하는 제4부의 공직자인 것이다. 아롱도 드골 대통령이 문화나 외교의 고위각료로 초청했으나 거부하고 소르본대학교 교수와 르휘가로 대기자로 일생을 마쳤다.

우리의 일부 언론인들이 청와대 등 공직을 출세로 여기며 포섭되는 모습에서 관존민비(官尊民卑)적 언론 구태로서 한국계의 적폐정산 대상이다.

최근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조사한 결과 ‘친정부의 편향성이 더 심해졌다’는 결론을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상파 TV 시사프로 스피커 총동원 주야로 한 목소리’라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KBS, MBC 등 TV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독자들이 외면하는 이유인 것 같다.

몇몇 일간지도 ‘어용’으로 비판되고 있다. 조중동 조차 외곽을 돌며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글이 나오지 않는다.

2015-2016 김정은은 3년 안에 지리산과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고 통일한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럼에도 한국 TV 라디오들이 김정은과 북한군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의 현지 지도와 ‘금수산태양궁전’ 행사까지 ‘친절하게’ 보도한다. 요즘 서울이 평양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북한 보도 홍수다.

보수성향 주요일간지들도 ‘청와대 눈치본다’ 비판대 올라

구미 선진 민주국에서 언론기관은 국가통치 기구인 의회, 행정, 사법의 3부 구조 외에 언론을 제4부로 인정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이 자유 평등 박애와 사적 소유권을 ‘누구도 소급해서 폐지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그 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진리로 정착했다. 그래서 오늘의 언론이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수호라는 제4권력의 정치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전제적 독재 체제에서는 매스미디어가 국가에 독점되어 나팔수로 전락한다. 공산국가의 프로파간다 언론은 비밀경찰과 전체주의 권력유지의 2대 구조를 형성한다. 프로파간다의 목표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전 국민의 통합에 있다. 그래서 공산당의

의 북한 김일성 특별 회견 후 필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1987년에는 5공 해직중임에도 한국 방문을 수행해 그의 서울대 강연 등 행사를 주선했다.

아롱은 김일성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폭발하자 중군기자로 방한해 르휘가로 1950년 6월 26일자 사설에서 “1946-1950년 냉전협약에서 동서진영의 군사행동을 금지했는데, 소련 위성국 북한이 최초로 협정을 위반했다. 사람들은 북한군이 이웃 나라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의 다른 부문을 점령하려고 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아롱은 유엔군의 급파를 요청한 요구한 사설을 보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 유엔군의 파병에 주장했다. 폰텐도 한국전쟁 발발시 유엔군 참전을 주장했으며, 1965년 ‘한국전쟁’을 출판했고, “내가 최

거울
&
목탁

지상파 방송 시사프로그램 편향성 논란

이념성향·시청률 집착 벗어나라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지난 2월에 펴낸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 ‘편향됐다’는 결론이 요즘 관심사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연구비 출처가 자사의 미디어연구소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가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의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건강한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학계의 연구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이상용
전 MBC 기자

‘특정 정파의 확성기’ 지적, 반성의 계기로

지상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이 편향됐다는 연구 결과는 자성할 일이다. 예전에는 권력의 억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친정부적 방송을 했다고 변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시절이 다르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정부 우호적 방송을 하는 셈이다.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는 말할 필요도 없고, 공영방송 MBC, TBS, 종교방송인 CBS, 공적책무가 강하게 주어져 있는 SBS는 보수와 진보, 중도적 성향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PD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과 시청률만 의식해서 진행자와 출연자를 선정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말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2016~2018년간 뉴스 이용집중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뉴스 이용 점유율이 종편 32.5%, 지상파 24.5%, 보도전문 채널 18.5%, 신문 16.2%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이용창구 기준으로 포털 35.8%, 종편 24.4%, 지상파 21.7%, 보도전문 채널군 11.2%, 신문군 2.3% 순이었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지상파군의 뉴스 이용점유율이 뚜렷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지상파 뉴스의 시청률 하락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종편은 뉴스와 시사보도성 프로그램, 논쟁적 시사 토론으로 메우고 있다. 종편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주력이라

는 채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에 반해 지상파 TV는 기자 리포트의 메인뉴스와 단신 스트레이트를 아나운서 멘트로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예능 사이에 내보내고 있어 뉴스와 시사보도에서 ‘열세’ 이미지를 형성하고 말았다. 사실 뉴스 영향력에서 미미한 라디오가 ‘논쟁적’ 앵커들을 동원하는 것도 시청률을 올리려는 교육책임지 모른다.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만은 단기적인 시청률 전략에 벗어나 객관성과 전문성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본다. 프로그램이 앵커의 말솜씨와 논쟁적 이슈만으로 굴러가다 보면 늘 소란스럽고 외부의 비난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지상파가 객관성을 방기하고 편향성의 의심을 사면 시청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 최근 1인방송의 부상도 지상파의 편향성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과거 TV와 라디오, 신문만 존재했을 때는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열세 만회’ 위한 논쟁적 앵커 동원 교육지책도 문제

지금 지상파 라디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치고 있는 듯하다. 지상파 시사보도 앵커는 자사 기자 출신이나 교수, 아니면 중립적 성향의 정치인, 변호사들이 적합한 것 같다. 작은 매체에서 폭탄 터뜨리듯 선정적 표현을 구사해오던 사람들이 설 자리인지 모르겠다. 지상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여온

채널 이미지가 있다. 예를 들면 신도수만 명의 대형 교회 목사가 특정 이념과 성향에 치우친 설교를 거침없이 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신도들이 대거 떠날 수밖에 없다. 지상파 시사보도의 채널 이미지가 지금 앵커들과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아는 한 그때는 앵커들이 팩트는 양보하지 않으면서 분위기로 간접적으로 친정부적 방송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 같고, 팩트보다는 주장을 강하게 앞세우는 것 같다. 아마 그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멘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사 쓰고 방송하는 것은 ‘기능’에 속하는데 처음에 속

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종편 보수와 지상파 진보좌파로 분류되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우려가 있다.

지상파가 객관성을 방기하고 편향성의 의심을 사면 시청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는다. 최근 1인방송의 부상도 지상파의 편향성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다.

과거 TV와 라디오, 신문만 존재했을 때는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유튜브 시대가 열리고부터는 기존 방송매체에 불만을 품고 직접 방송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특정한 정파의 확성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다양한 세력들의 여론을 반영함과 아울러 이들 간의 이해와 화해를 돕는 책무도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언론은 한쪽 편들기로 영향력을 높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여론이 언론을 통해 적절하게 수렴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분출구를 찾지 마련이다.

광화문을 나가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언론이 ‘극단적’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극단적인 주장들이 적절히 소통되지 못하면 점점 더 과격화, 폭력화의 길로 접어들 우려가 커진다.

보수적 정당이 진보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보적 정당이 보수적 주장에 관용하듯이 지상파 방송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보수 언론이 필요하듯이 진보좌파 언론과 언론인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상파는 특정 이념적 매체로 분

리되도록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하기가 쉽지 않다. 직설적, 선정적 표현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사라지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보수 언론이 필요하듯이 진보좌파 언론과 언론인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상파는 특정 이념적 매체로 분

리되도록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하기가 쉽지 않다. 직설적, 선정적 표현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사라지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

도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제도로 이행했음에도 오늘 우리 언론이 유일하게 역주행하고 있지 않은가.

1990년대 초 이탈리아 공산당기관지 ‘유니타’는 당해산과 함께 자진 폐간했다.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도 최근 파산했다는 뉴스를 르몽드지가 전한다. 한국 언론은 ‘자본주의 보도제도’의 사수(死守)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10면에 이어서

냉전시대, 서독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언론은 공산진영의 프로파간다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구미 언론들은 1979년대 체코 반체제운동 77서명 지식인운동, 63년 ‘프라하의 봄’, 56년 부다페스트의 자유불기, 1980년대 소련 원자무기의 아버지 사하로프의 반체제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붉은 광장의

소련군 퍼레이드도 단신으로 보도할 뿐이다. 서방 진영의 보도를 본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붕괴 주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북핵과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진실보도를 거의 볼 수 없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때와 6·25전쟁, 연평도포격, 천안함포침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김정은의 요구만 수용한 ‘한반도평화주의’를 언론이 받기만 하는 보도를 이해하기

헌법이야기 16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하여

‘주권 영역 밖’의 문제 국제법 따라야



배보운
변호사
전 헌재 대변인

지난 2월 20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재판과 관련하여, “일본이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성의를 갖고 응해야 한다”고 하며,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기초해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중의원에서 위 재판에 대한 일본 측 대응과 관련한 야당의원의 질문에, “한국이 1965년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려는 조치는 하지 않고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발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한일관계는 동해상에서 해군함정 간에도 이르러 유례 없이 이상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외국 주권과의 충돌, 외교적 문제 야기할 수도

한 나라의 재판권은 그 나라의 주권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그 재판권은 그 주권이 속하는 그 나라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주권의 영역 밖의 문제와 나라와 나라 사이 그 국민 사이의 관계의 규율은 조약,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규에 의한다. 한 나라의 최고 법은 헌법인데, 각국은 헌법에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국제법 우위론의 입장과 동위론의 입장이 있는데,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후자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규율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와 예양의 차원에서 국제법을 존중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후자의 입장에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국제법 친화적인 헌법해석’으로 국제법을 존중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독일통일과정에서 구동독에서 몰수재산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구소련 점령하의 몰수재산의 경우와 구동독당국에 의한 몰수재산의 경우를 달리 규율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성을 인정하여 원상회복으로 처리한 반면, 전자의 경우에는 국제수용법의 법리 등을 존중하여 불법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합법성을 전제로 조정적 보상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독일통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고려 통일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제법 존중과 예양차원과 더불어, 독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독일 사법부에서 구소련 점령 당시의 몰수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사법기관 등 제3의 판단기관에 의한 판단도 아니어서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공연히 외교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

는 점이 고려되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대법원 2018. 10. 30. 2013다61381)의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반인도적인 불법적 강제 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신일본제철에 그 배상을 명한 것이다. 그런데 우선, 문제된 강제 징용의 반인도적인 불법성에 대하여,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기구나 다른 국제사법기구에서 판단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판단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다음, 우리 역대 정부의 입장은 1965년 한일협약의 내용에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의 합당한 근거나 이유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강제 징용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정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강제 징용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정한 바가 전혀 없다. 우리 법원이 강제 징용의 불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일본 정부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권의 범위 내인 재판권의 행사 결과고 우리 국내적 효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

結者解之…법원의 韓·日갈등 수습 노력 필요

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7년 그와 같은 견지에서 희생자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 바 있다. 물론 사법부는 권력분립의 원칙, 법원의 독립상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의 범위 내에서 국내법적 효력에 국한된다.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 대한 것으로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대법원은 조약의 해석을 통해 강제 징용의 반인도적인 불법으로 인한 배상이 1965년 한일협정의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서, 나아가 조약의 해석을 넘어 ‘강제 징용의 반인도적 불법성’에 대하여 판

사가 전혀 없다. 우리 법원이 강제 징용의 불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일본 정부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주권의 범위 내인 재판권의 행사 결과고 우리 국내적 효력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 내에 일본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 문제될 수 있고 판결 직후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외국 주권과의 충돌 문제 등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문제를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해결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아니

한 정부의 부작위를 위한 확인하는 결정을 한 바 있고(2011. 8. 30. 2006헌마788),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 결과 2015. 12. 한일위안부 합의에 이르렀고,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사과의 의미를 담은 출연금 10억엔을 부담하였다.

동 재단에서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총 44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 11. 21. 화해치유재단 해산결정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계속성

과 국제관계의 신뢰성의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는 교역국으로 국제관계의 신뢰성은 필수적이고, 향후 남북관계와 더불어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와 굳건한 신뢰관계는 우리의 장래 국리민복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이제 우리 법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관계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독일처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정부 자체의 품격의 문제이지 이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독립을 위한 3·1독립만세운동 근대화의 큰걸음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 일본의 군국주의에 결연히 맞선 3·1독립만세운동은 한국 민족사에 우뚝 솟은 장엄한 역사다. 일제(日帝)에 나라를 빼앗긴지 10년도 안 된 1919년에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120여만명이 참여해 2만여명이 죽거나 부상당한 희생을 딛고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것은 민족적 자각의 큰 걸음이었다. 3·1운동과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계 출판계 등 지식 사회와 영화 음악 미술 등 문화계의 3·1운동 기념 행사가 2월 말 다채롭게 시작되어 일제 식민 지배와 민족의 자각을 재조명하고 검증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2월 19일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항거:유관순 이야기>시사회가 열렸고, 캘리포니아주 챗위스의 프록시 플레이스 갤러리 '3·1운동 100주년 특별전시회'에 출품된 <태극기를 품에 안고 천국문을 나오는 유관순 열사 그림> (모린 가프니 울프슨 작품)도 같은 날 공개됐다. '어찌 우리 잇으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 주최 측은 "3·1 독립운동을 상기하고 자유를 위해 세

상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의 비슷한 저항 운동을 되짚어보고자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현지 미술가 12명이 참여했다. 이때 한국 작가가 그린 유관순 열사 패션 잡지 보그 표지 모델화도 19일 공개됐다. 전 세계 아티스트 32명이 작가에게 영감을 준 역사 속 여성들을 선정해 프랑스판 보그 표지로 제작한 것이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마리 앙투아네트, 이사도라 덩컨, 엘리자베스 테일러, 미셸 오바마, 마돈나, 마가릿 대처 등을 표지화로 그린 작품이 파리 조페 박물관에서 2월 27일까지 전시됐다. 지식산업사(사장 김경희)가 2014년부터 4년간 한·일 학자 11명이 준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일공동연구를 《3·1독립만세 운동과 식민지 지배 체제》로 19일 펴냈다. 국제정치학자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는 19일

건국이념보급회 포럼에서 '《독립정신》(이승만 저)과 3·1운동의 세계사' 주제 논문을 통해 《독립정신》이 제시한 독립운동 방향과 월슨 민족자결주의와 3·1독립만세운동과의 관계를 밝혔다. 2월 22일 싱어송 라이터 안예은이 작곡한 유관순 열사와 감옥 동지들이 부른 <8호 감방의 노래(Women's march)>도 음원으로 공개됐다.

조민호 감독의 <항거:유관순 이야기>는 '여옥사 8호실'에서 1920년 3월 1일 일어난 '제2의 만세운동'을 흑백으로 담아낸 옥중 레지스탕스 이야기로 관객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유관순 역을 맡은 고아성 배우는 "유관순 열사가 당한 억울한 고문과 성스러운 자세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며 "정신적으

유관순 열사 고문치사 등 반인권적 폭력 잊지 않아야

로나 육체적으로 고된 경험이었다"고 고백한다.

1979년 정호승이 유관순 열사를 '창녀, 미친년, 바람난 어머니, 문둥이'로 비하한 유관순 연작시 9편을 발표한 이후 '친일파가 조작한 인물'로 폄하돼 전교조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던 유관순 열사가 2019년에 재조명 받는 것은 일제의 무단정치로 잔인하게 희생되었던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병천 비폭력 독립만세운동 참여자 19명을 살해한 조선총독부가 보안법을 적용해 5년을 선고하자 유 열사는 이 판결 항고 포기로 저항했다. 독립만세 외치는 것만이 유일한 저항이었던 유 열사가 일제 형무관의 잔악한 고문으로 옥사하는 과정을 그린 <항거:유관순 이야기>에 관객 모두가 100년전 한국의 참담한 비극을 체험했다.

이달의 논점(論點)



박석흥

본회 주필
전 문화일보 국장

3·1독립운동 50주년 기념사업으로 1969년 천관우 동아일보 전 주필이 논문 76편을 모아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을 펴냈고, 7개 역사학회가 공동으로 12회 전국 역사학대회를 열어 3·1독립운동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기념으로 지식산업사가 펴낸 《3·1독립운동과 식민지배 체제》는 2014년부터 4년간 서울, 다롄, 요코하마, 하얼빈에서 열린 한·일 공동 세미나를 정리한 것이다. 2001년 '한국병합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재조명' 국제학술회의 팀이 조직되어 2009년에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토>를 이태진, 사사가와 노리카쓰 공동

편집으로 펴낸데 이어 2019년에 출간한 《3·1독립운동과 식민지배 체제》는 한·일 학계의 식민사관 극복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3·1독립운동과 식민지배 체제》의 공동 편집자인 사사가와 노리카쓰 명예교수(笹川紀勝국제기독교대학, 헌법·국제법)는 1905년 통감부 시대부터 일본 패전 시점까지 조선총독부의 6,608건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추적, 조선인들의 기아 사태, 신사 참배 거부에 대한 탄압, 징용 징병 거부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 젊은 여성의 징발 거부에 대한 비인권적 탄압 등을 밝혀 일제하 한국인의 '노예적 상태'를 구체화 했다. 3·1독립운동의 비폭력 시위가 보안법 출판법 위반을 적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수 없었던 것을 인식한 총독부가 진압 과정과 심문 과정에서 저질렀던 끔직한

폭력 사태도 파헤쳐 고발했다.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이바라키(茨城)대학 명예교수의 유고 <3·1독립만세운동의 세계사적 시각>은 식민주의 사관 전개 과정을 소상하게 정리했다. 도리우미 유타카(鳥海豊) 신문대학교 교양학부 강사의 <3·1운동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3·1독립운동 후 식민지 근대화론의 발생과 선전 과정을 조사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는 것을 일부 미국 일본 한국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총독부 선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3·1독립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근대화론 선전을 강화해 미국 학계에도 전파했으나 진실이 아니라고 유타카 강사는 단언했다.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3·1독립만세운동의 결정적 동기였음도 밝혀졌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1918년 11월 28일 월슨의 특사 크레인(1858~1939)이 상해에서 월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연설해 이 자리에 있었던 여운형이 김규식을 파리평화

회의의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장덕수, 선우혁, 서병호 등 신한청년단원을 동경과 서울로 보내 2·8독립선언이 발표되고 국내 3·1독립만세운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이승만 박사가 1918년 10월 하와이에 온 여운홍과 사록스 평북 선천 미동병원장에게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연두교서를 설명하고 송진우, 함태영, 양전백 등에게 "한국인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 불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대중 운동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고 부탁했던 것을 밝히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 국내 지도자들에게 알려져 만세 시위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국민 통합과 애국심을 진작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주 유채꽃

황색 캔버스 만발

제주에는 지금 봄을 알리는 노란색의 유채꽃이 가득하다. 대개 3월부터 5월 사이에 절정을 이루는 유채꽃은 2월에도 특유의 노란색깔로 이른 봄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근처 유채꽃 재배단지에서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촬영



인사이드 저널

Inside Journal

이달의 보도사진

“우주닭은 무지개구름”

nature부문
최우수상

영남일보 윤관식 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이동희)는 제193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nature 부문 최우수상에 영남일보 윤관식 기자의 “우주닭은 무지개구름”을 선정했다.

신문 사설 보기

같은 팩트·다른 시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진통 끝 합의했지만 갈 길 멀다

어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표방한 경사노위에서 이뤄진 첫 성과다.

지난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후 두 달 가까이 지났다. 대통령이 출범을 앞둔 경사노위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탄력근로제에 대한 결정 차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이 합의하고 공개 발표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볼 수 있고, 어차피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을 시간 낭비만 초래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침예하게 대답하는 사안에 대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만하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한꺼번에 16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치다. 기대 효과와 함께 갑작스러운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다. 그렇다면 도입 전에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보전 같은 보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이번

에 경사노위가 탄력근로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 52시간 제도의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앞으로 탄력근로기간 확대에 따른 과로 방지 대책, 임금손실 보전대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보면 탄력근로기간 확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못 박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는 조항을 한번 더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노사위에서 합의하고 국회가 입법 조치를 했다고 해도 노조 입김이 강한 대기업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대기업 강성 노조가 몰려 있는 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점도 입법 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

국회는 신속히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3월로 끝나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이번 합의 사안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탄력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

〈동아일보 2019년 2월 20일자〉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보여준 탄력근로제 확대 극적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영계 요구로 시작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국회가 2월 처리를 못 박아 논의 기간이 짧았고 노사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 마지막이라고 했던 전날 전체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바람에 노사 입장만 정리해 국회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경사노위는 최종 논의 시한을 하루 뒤로 미룬 뒤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극적 타협에 성공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의 여러 안건 중 결과물을 내야 했던 첫 의제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컸던 문제가 노사 합의로 결실을 본 것은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국민 기대에 부합한다는 점에

서 뜻깊다. 합의문은 노사가 양보하고 절충한 산물이다. 우선 노동계는 단위기간의 6개월 확대를 수용했고, 경영계는 1년 확대 요구를 접으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의무화, 공개적인 임금 보전 방안 강구를 받아들였다. 기타 여러 쟁점에서 ‘노사 협의와 합의’를 강조한 원칙도 돋보인다.

경사노위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던 국회로서는 대립과 혼란의 최소화로 입법 과정에서 부담이 줄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여야는 모처럼의 노사 합의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신속한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불사를 선언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장 말대로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의 ‘발전 공식’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일보 2019년 2월 20일자〉

영화 ‘극한직업’ 왜 1천만 관객인가

민심을 꿰뚫은 기획력 딱딱한 삶에 웃음 선사



정중헌
본회 편집위원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

이병헌 감독의 코믹액션 영화 <극한직업>이 1000만 관객을 훌쩍 뛰어 넘어 1500만명 고지로 돌진 중이다. 과연 역대 최고인 1761만 명의 <명량>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사는 것이 힘들 때 코미디가 먹힌다’는 공식 인증한 셈

1천만 관객이 본 후여서 기대가 컸던 탓도 있고, 영화에 대한 취향 탓도 있겠지만 필자는 <극한직업>을 보면서 크게 웃지도 않았고 후반 액션에 빠져 들지도 않았다. 가볍게 웃으면서 시간 보내기에는 괜찮은 영화 정도였다.

그렇지만 1천만 관객이 들었을 때는 분명 그만큼 이유나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1천만을 넘은 한국 영화 19편이 저마다 특징이 있었다. 10여 년 전 필자는 천만 관객 영화의 특징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첫째 요인은 내러티브 즉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었다. 그래도 인구 5천만 나라에서 1천만 이상 관람은 수치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기획의 시의성과 작품의 완성도, 인터넷에 의한 전파력, 중복 관람 등을 꼽을 수 있었다. 1500만명이 넘었다면 15세 이하와 80대 이상을 뺀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보았다는 계산이니 분명 그 저변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대박 영화 <극한직업>의 흥행 요인 첫째는 민심을 꿰뚫은 시의적절한 기획력이라고 본다. 요즘 어딜 가나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푸념이 들린다. 새 정권이 들어서

면 뭔가 나아지려니 기대했는데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알바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물가까지 치솟아 우리네 살림살이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극한직업>은 이 같은 딱딱한 삶에 웃음을 선사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는 권력기관의 비리나 사회 갈등을 다룬 액션이나 패러디 영화가 많았다. 관객들이 그런 영화들에 식상을 느끼는 시점에 이병헌 감독(39)은 코미디와 액션을 믹스한 가볍고 쉬운 소재의 영화를 내놓았다.

경찰의 마약반 형사들이 국내 잠입한 국제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액션이면서도 잠복수사를 위해 치킨장사를 한다는 웃기는 설정에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을 살려 관객들을 ‘빵터지게’ 한방 먹인 것이다. 심각한 메시지를 억지 신화는 과감히 버리고 대신 스피디하게 내뱉는 잘진 대사와 웃기는 상황으로 유머를 살려냈다. 사는 것이 팍팍해지면 코미디가 먹힌다는 공식을 입증한 것이다.

둘째는 배우 캐스팅과 캐릭터 구성이 탁월했다는 점이다. 실적부진으로 해체위기를 맞은 마약반의 만형 고반장(류승룡)은 장 형사(이하늬), 마형사(진선규), 영호(이동휘), 재훈(공명)과 함께 잠복수사에 나선다.

마약반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 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사는 뒷전, 치킨장사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마약반에게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자 통쾌한 액션으로 일망타진한다는 줄거리다. 닭을 파는



을 탈출 안다’는 평을 듣는 그는 이번 작품에서 비중을 낮추고 힘을 빼는 대신 앙상블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잘 해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하는 대사는 일품이었다.

이 영화에서 마 형사 역 진선규라는 배우가 없었으면 아마 싱거웠을 것이다. <범죄도시>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는 이 영화에서 절대미각을 지닌 마 형사 역을 맡아 치킨 집을 일약 맛집으로 소문나게 하는가 하면

자유로운 창작 정신과 독립영화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적 상황을 현실로 비틀고 요소 요소에 웃음 유발 장치인 유머를 배치하고 배우들의 캐릭터끼리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B급 영화의 특징을 이병헌 감독이 잘 살려낸 것이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부 액션도 타 영화에 비해 특이점은 별로 없으나 전반부 코믹 상황과 대조를 이루면서 관객들에게 냉수처럼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안겨 주었다.

취향에 따라 <극한직업>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명이 보았다는 것은 이병헌 감독이 “웃음과 액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B급 영화의 매력”을 살려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천만 영화를 분석해 보면 관객 수가 영화의 질이나 완성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수주의나 편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1천만 영화 속에는 1천만명이 모일 만큼의 ‘그 무엇’이 있고 시대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힘 내세요 병헌씨>, <스물>에 이어 <극한직업>으로 1천만 관객 감독 반열에 오른 이병헌 감독은 팍팍한 세대에 가벼운 웃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역설적으로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이 영화를 히트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EBS의 탐사 프로그램 <극한직업>을 자주 보는 편이다.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 그들의 삶의 의지와 난도를 보여주는데 역경 속에서도 직업에 대한 긍지와 가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영화 <극한직업>에도 범죄를 소탕하는 경찰들의 그 같은 의지가 정신이 일부라도 구현된 것은 아닐까?

다수 관중 인기몰이엔 이유있는 시대의 메시지 담겨있어

것인지, 범인을 잡는 것인지!

이병헌 감독은 1인 주역 대신 배역의 비중을 비슷하게 설정하여 5인 5색의 개성 연기를 끌어내 무엇보다 균형을 살렸는데 이런 설정과 앙상블이 주효했다. 누구 하나만 웃기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웃기고 제맛을 살리도록 밸런스를 잘 조정하여 개성을 살린 것이다.

그래도 이 영화의 기동은 류승룡(49)이다. 2013년 <7번방의 선물>에서 6세 지능의 딸 바보 연기로 천만 관객을 모은 그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명량>에 이어 이번까지 4편이나 1천만명 영화 주역을 맡았으나 최근 4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다시 흥륜을 날렸다. ‘선을 지키며 리듬

이하늬와 러브라인도 해내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잘 소화해 냈다. 특히 능청스런 연기와 표정 연기를 맛깔나게 살려냈다.

재훈 역 공명이 초보 형사 이미지를 잘 해냈고, 영호 역 이동휘도 제몫을 했다. 이 영화는 전반부를 코믹하게 끌어가다가 후반부를 폭풍 액션으로 몰아가는데 이 후반부를 견인한 악역배우들의 열연도 수훈갑이다. 특히 신하균과 오정세가 돋보였다. 사 이코패스 신하균은 악역인데 푸 하고 웃음 나오게 했다.

1천만 관객 영화 중 코미디는 ‘B급 영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A급 영화처럼 질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은 대신 메이저 영화가 표현하지 못하는

직격 인터뷰

6·25전쟁납북인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미·북 회담서 피해보상 요구해야”**

이향숙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우리 국민은 가족애가 남다르게 두텁고 끈끈한 민족이다. 그래서 가족들과 타의에 의해 생이별하는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다. 6·25로 갑자기 사랑하던 가족, 아들, 아버지, 남편이 북으로 납치된 납북자 가족은 전쟁 발발 69년이 되었건만 그 행복을 빼앗겼고, 아직도 그 상처는 아프다. 납북 인사 가운데는 언론인들도 약 300여명이 가까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호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해 관련 단체를 통해 알아본다.



이미일 이사장

‘北은 6·25 납북 사과하라’

6·25전쟁납북인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씨(70)는 나이와 체력으로는 연약해보이지만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다. 이 이사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미·북 2차 회담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정은과 함부로 종전 선언을 거론해서는 안 돼요. 납북 실종자 검증은 우선해야죠. 전쟁 전 문제부터 하나씩 지적하고 납북자 문제, 전쟁포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미국은 그걸 알고 대처해야하는데 이번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보도를 보면 너무 유연하고 약합니다. 남북한 정상회담 때와 작년 1차 북·미 회담 때도 저희 회원들과 함께 납북 문제를 의제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는데 묵살됐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북에 제안하기 전에 북한에 먼저 보상을 청구하고 받아야죠.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유해 발굴, 납북자 확인 등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죠. 지금 준비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고, 결국은 미국도 힘들어질 겁니다.”

이 이사장은 부친 이성환씨와 백부 형제가 납북됐다. 1920년생인 부친은 청량리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했는데 50년 9월 4일 저녁 갑자기 끌려갔다. 이 이사장은 당시 첫돌 무렵이라 부친 얼굴은 기억에 없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납북자들 소식을 알아내는데 앞장서왔다. 이화여대 졸업 후 의상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00년에 현재의 협의회를 설립, 이사장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6·25 납북자는 485명이라고 말했어요. 터무니없이 적게 축소한 거죠. 그래서 협의회를 만들고 아버지 소유의 땅에 지어진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매진했어요. 그 당시 알아본 납북자는 700여명이었는데 말예요.”

가족들이 서로 땀겨져 하나가 되어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다.
- 쿼리 부인 -

협의회 창립 후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오로지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에 바쳤다. 6·25 나던 해 이 이사장은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쳤다. 아직도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납북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누비

중 이데올로기와 관련 깊은 언론인과 종교인이 가장 많이 납치됐다. 납북 언론인은 284명이고, 피살된 언론인은 36명이다. 납북 언론인 중에는 일제시대 동아일보 사장 백관수, 한성일보 사장 안재홍, 소설가이며 동아일보 편집국장 겸 논설위원을 지낸 이

**평생을 납북자 생사확인·송환에 바쳐...관련 저서도 15권**

면서 강연을 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했고 3년 전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인권탄압 발표회에도 초청받아 열변을 토했다.

가는 곳엔 위험도 따랐다. 제네바에서는 북한 요원들의 위협 때문에 스위스 경찰이 신변보호를 했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 관련자와 장소를 발로 뛰어 찾아 확인한 근거로 발간한 자료집과 책이 모두 15권이나 된다. 처음에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답만 들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도서관, 장서가 등을 찾아 그녀가 발굴한 납북 민간인은 모두 8만 2959명, 당시 김일성이 부족한 인텔리를 보충해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언론인 등 지식인, 그

광수, 방송인(KBS) 겸 시인 김억, 수필가 김진섭 등이 있다.

동아일보 기자가 가장 많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골인 장면 사진에서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고 동아일보에 게재한 이길용 기자, 사진부장 백운선, 논설위원 정인보 등 16명이 납북됐다. 정인보는 그해 11월 묘향산 근처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광수도 그해 9월 폐결핵으로 죽었다.

이길용 기자의 아들 이태영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평생 체육부 기자로 살았고, 현재 대한연론인회 감사이며, 부친이 납북된 아픔을 안고 이미일 이사장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동안 여러 장애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남북한 간의 어려움 등 여건과 맞서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이 이사장은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2010년에 국회 특별법 통과, 국무총리 산하 ‘6·25 전쟁납북자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등,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녀는 납북자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국회의원과 장 차관에게 ‘물망초 배지’를 배포했다.

지난 해 4월에는 한국자유회의의 포럼에서 ‘납북 공무원 2000명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역시 작년 8월, 9월에는 송갑석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실종자 관련 법안이 실종자= 납북자로 되어서 회원 100명과 국회 앞에서 일주일간 반대 시위를 했었다. 집을 잃은 실종자와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같은 호칭으로 불리게 된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 그들은 11명을 일일이 사무실로 찾아가서 설득, 결국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같은 해 가을 숙원이던 납북자 기념관을 북한 땅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파주 임진각에 정부 지원으로 개관했다. 기념관에는 6·25 납북자 명단과 관련 자료 등이 망라돼 있다.

“북한이 납북을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을 해야죠. 그동안 두 번이나 국회에 납북 피해보상법 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이제는 국가의 보상을 바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위로 한 마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납북 공무원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 명예회복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순직 공무원이나 군경만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 나라의 주요 위치에 있던 납북공무원 2000명의 희생도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요?”

나와는 서울사대부고 3년 후배로 밝혀진 그녀의 강인하고도 단호한 바람이 꼭 속히 이루어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특파원
수첩

北인민군 원수 지낸 거물 오진우 파리입성 취재 소동

눈 부릅뜨고 현장지켰는데 ‘영상 낙종’



고수웅
본회 회우
전 KBS 파리 특파원

1994~199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요즘만큼이나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워싱턴, 파리, 베를린 등에서 모여든 한국 측 기자들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북한 핵 관련 관심 국가들의 특파원들이 제네바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방송, 신문, 통신 등 20여명의 취재진이 파리에서 제네바로 출장 취재 중이었다.

“아! 뒷문!…북병 SBS계약직 카메라맨에 물 먹었다”

당시 미국 측에서는 “갈루치” 북한 핵 특사가 제네바 미국 대사관에 자리하고 있었고 북한 측에서는 강석주 외무상이 핵 담판을 위해 레만 호수가 북한대사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이미 북핵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각국 기자들도 양쪽 대사관을 오가며 취재열기에 한창이었으며 결국 핵문제는 미국 측이 경수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그 뒤 북한은 위장술로 최근까지 핵을 계속 개발해왔던 것이다.

제네바 회담을 피곤하게 취재한 뒤 프랑스 파리로 돌아온 파리 주재 한국 측 특파원들은 오자마자 큰 뉴스가 터졌다.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신병 치료차 프랑스 파리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오진우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1963년 인민군 대장으로 67년에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냈으며 69년 인민군 총참모장을 거쳐 90년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1992년 4월에는 인민군 원수까지 오른 권력실세였다. 그동안 건강문제로 휴양차 중국을 경유해 군사대표단장으로 나이지리아 방문도 했던 인물이라서 77세인 오진우의 건강 문제는 자주 화제에 오르내리던 인물이긴 하지만 파리 입성은 한국 특파원들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가 파리 시내에 있는 라예넬(LAENNEC) 병원에 입원 했다는 소식은 알려 졌지만 병명과 그의 동태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라예넬 병원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특파원들은 일본 NHK 등 일본 특파원들과 함께 뒤섞여 서로 귀동냥을 하며 끼니도 거른 채 동물원 안의 동물들을 찾듯이 병원 정문 밖 철창문 앞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나절을 서성이던 KBS·MBC·SBS 3사 특파원들과 카메라 기자 등은 ENG 카메라로 각자 병원 간판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오프닝 멘트를 녹화한 다음 본사로 위성을 쏘기 위해 서둘러 프랑스 텔레콤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본인도 오진우의 그림자조차 찍지 못한 채 병원 외곽의 화면에 오진우의 예상 병명과 건강 상태만을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만 가지고 1분20초 정도 만든 뒤 KBS 본사로 위성으로 리포트를 보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SBS팀이 이미 리포트를 보내고 나오던 참이어서 “위성 잘 보냈느냐?”고 물은 뒤 아무 의심없이

“당신 물 먹었구먼!” 전화가 바로 끊겼다. 눈앞이 캄캄했다. SBS에 확인해보니 SBS 계약직 카메라맨이 저와 MBC 정홍보 특파원이 병원 정문 앞에서 오프닝 멘트를 녹화 하는 사이 NHK 카메라맨을 따라 병원 뒷문 쪽으로 가 마침 진료를 받고 나오는 “오진우”가 승용차에 타는 순간을 촬영 했다는 것이었다. SBS에 크게 한방 먹었다.

당시 유자효 부장에 SOS…15초 영상 얻어 수습

위성송출실로 들어가 리포트를 송출했다.

저녁 9시뉴스가 방영되는 시간은 프랑스 시간으로 8시간이 빠른 오후 1시다. 따라서 점심식사를 막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 왔는데 본사 국제부(외신부) 정용석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이! 고수웅씨!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은 오진우 얼굴을 못 찍었다더니 SBS는 8시 TOP 뉴스에 오진우 얼굴이 나가는데?” “네?” “어… SBS 팀도 똑같이 병원정문 앞에서 만나절을 같이 있었고 조금 전에 프랑스 텔레콤에서 봤을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당신 물 먹었구먼!” 전화가 바로 끊겼다. 눈앞이 캄캄했다. SBS에 확

인해보니 SBS 계약직 카메라맨이 저와 MBC 정홍보 특파원이 병원 정문 앞에서 오프닝 멘트를 녹화 하는 사이 NHK 카메라맨을 따라 병원 뒷문 쪽으로 가 마침 진료를 받고 나오는 “오진우”가 승용차에 타는 순간을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SBS에 크게 한방 먹었다.

어쩔 수 없이 본사 정용석 부장께 전화를 걸어 SBS에 부탁해 9시뉴스에 한 커트 영상을 구걸해 주십시오! 하고 염치없는 부탁을 드렸다.

1시간 뒤 본사 외신부에 확인했더니 당시 SBS에는 파리 특파원을 본인보다 먼저 마치고 들어갔던 유자효 기자가 SBS의 초대 정치부장을 거쳐 부국장 대우 국제부장으로 근무하고



역사의 인물
북한 인민군 원수 오진우

있을 때였다.

알고 보니 고교 선배이기도 했던 정용석 부장이 영상구걸을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촬영한 일체의 영상을 서로 주고받기를 안 하겠다면 안 쥐도 좋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유자효 부장의 배려로 약 15초의 오진우의 영상을 얻어낸 것이다. 이 짧은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몇가락처럼 30초가량 늘려 9시뉴스 본인 리포트에 삽입시켜 넣었던 모양이다.

결과론으로 따지면 오진우 영상이 SBS는 8시 메인뉴스에 KBS는 9시 메인뉴스에 나갔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KBS 고수웅 특파원이 파리에서 영상 낙종을 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일생 방송기자 생활 중에 수없는 리포트와 기사를 방송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낙종을 당한 것은 처음이거니와 마음의 상처, 본사의 평가면에서 완전 패잔병이었다. 그것도 정식 직원이 아닌 파리에서 임시로 고용해 근무하는 카메라맨한테서 보기 좋게 한방 먹은 것이다.

방송 기자 생활 30여년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오진우 얼굴 영상! 결국 그는 다음해인 1995년 2월 25일 폐암으로 생을 마쳤다.

본회 편집국장

My Way 2

역전에 성공한 중년의 반란 **최명우 오페라 인생****나에겐 아직 4막이 남아있다****유 자 호**본회 편집위원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최명우 대한연론 편집국장의 패션은 늘 세련되고 젊다. 그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촘촘하게 세분돼 있다. 어떤 때는 밤을 새며 일을 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역점을 쏟는 분야는 음악이다. 적극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보급하고, 오페라 대본도 썼다. 제2의 인생을 음악으로 화려하게 걸어가는 그를 대한연론인회에서 만났다.

**오페라 극작가·클래식 해설가로 변신한 영원한 기자****황진이 재해석...그녀는 한국의 '노라'였다
송도 배경의 오페라 北쪽개성 공연 기대****-지금까지 걸어 온 길은?**

“제 인생의 반세기는 언론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문사로 진출했으니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DBS 동아방송에 원서를 내고 필기와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불가관정을 받았습니다. 고교 때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X레이에 잡힌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으로 가자’했고 좋은 기자와 작가가 되자하는 꿈이 오늘의 저를 낳은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곳의 DNA는 또 다른 유전자를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의 음악에 대한 동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고교 때 서클활동을 하면서 만난 친구 가운데 바리톤 김성길 교수, 가수 김상희 씨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따라서 노래를 즐기곤 했었지요. 이 무렵 당시의 명동 시공관에서 오페라 ‘춘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충격적 감동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제게는 이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제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페라 매니어가 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창작 오페라 ‘원술량’을 감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훌륭한 오페라가 있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곡자 오숙자 교수와 인연이 되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황진이는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기생이 아니라 한국 여인으로써 여권을 부르짖은 한국의 ‘노라’요, 당대의 여류문사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까요.

제가 대본을 쓰고 오 교수가 작곡을 해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매스컴을 통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과 ‘투란도트’는 일본과 중국의 여인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의 ‘동방의 가인-황진이’도 이와 어깨를 견줘야 한다는 오기로 대본을 썼습니다. 한국 오페라의 세계화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황진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그렇지만 저는 이 오페라가 개성에서 공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진이는 조선 중종 때의 실존 인물로 개성 출신이며 그의 무덤도 현지에 있습니다. 북에서는 지금도 황진이의 묘를 참배하는 사람들이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의 저와 이수만씨를 나란히 새로운 MC로 소개 기사를 써 줬는데, 이수만씨는 지금의 K팝을 이끌어낸 원조로 SM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장르는 다르지만 지금은 클래식 해설자로 인생 제3막을 열고 있으니 이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내일의 운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유는 클래식과 접할 마땅한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클래식을 처음 대하는 데 80분에 이르는 전곡을 별 다른 해설 없이 듣기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구 규칙을 모르는 이에게 9이닝의 경기를 지켜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유튜브가 되려 합니다. 지금은 월 4회 ‘최명우의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유튜브에 넣어 모두가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름대로의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도 마련했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클래식 전도사’라 불러 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래식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음악과 함께 살아왔으니 나름대로 상당한 자료는 모아 놓은 셈입니다. 문제는 이를 정리해서 내 놓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뜻 같아선 유튜브 방송과 더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감상법’을 내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대한연론의 편집을 담당한 지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클래식을 통해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음악 쪽으로 다가가 회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제 인생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흔히 인생 2막을 얘기하고 3막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페라는 4막이 주류라고 할까요. 인생의 종장을 화려한 피날레로 장식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이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는 대한연론의 회우라는 것에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곁에 600분이 넘는 회우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함께 클래식 여행을 해보실까요.”

‘Life is no limits’ 끝없는 도전...예술비평가로 우뚝

창작 오페라 ‘동방의 가인 황진이’ 초연 국립극장 로비에서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잘되면 황진이의 송도 즉 개성공연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 왔나?

“동아일보에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MBC와 교통방송의 작가활동을 해왔었는데 방송프로그램을 맡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접고 방송으로 진출해 스포츠 TV의 토크쇼 사회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각 일간지들이 ‘역전에 성공한 중년의 반란’이라고 저를 떠 올려준 것에 늘 고마운 생

입니다. 저는 전문 음악인들이 일찍이 클래식 해설에 집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클래식은 어려운 것도 아니며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구성이 고급스럽다는 것인데, 깨치고 보면 클래식처럼 쉽고 다정한 것도 없다는 것을 전해드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드하는 클래식 음악회에는 많은 애호가들이 참석합니다.

클래식을 이해하는 데는 음악사 예술사상사 철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클래식의 느낌과 감동이

언론인 단골맛집 2

다동 가마솥 나주곰탕

정갈 담백... 기자들 입맛에 '딱'



유한준
본회 편집위원

친절한 집, 맛있는 식단, 가고 싶은 식당'으로 소문난 집, 중구 다동 서울 시청 뒤편의 '권명옥 가마솥 나주곰탕'은 원로 언론인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이다. 젊은 현직 기자, 공무원, 회사원들이 주요 단골 고객인 식당, 곰탕, 갈비탕, 코다리 냉면, 파전, 김치전 등 감칠맛 나는 메뉴가 전천후 식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현직 기자·신문협회·LG 코오롱 등 CEO들도 즐겨 찾아

식당 명칭이 '나주곰탕'이라 프랜차이즈 업소 같지만 전혀 무관한 독립적 식당, 이 자리에서 개업해 뿌리를 내린지 20년이 넘었다. 권명옥 사장(70세)이 남편 소정민(75세) 점장과 막내딸, 그리고 5년 이상 12년 차의 종업원 10명과 함께 한 가족처럼 움직이면서 맛과 친절을 가득 담아 고객에게 정성껏 제공하는 일반 식당이다. 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소정민은 카운터로, 막내딸은 엄마 사장을 돕는다.

“식대는 다른 식당과 엇비슷하지만 맛으로 승부합니다. 간판 메뉴인 나주곰탕의 경우 다른 업소에선 1만 2,000원인데 우리는 9,000원에 드려요. 코다리 냉면은 9,000원, 갈비탕 1만 5,000원, 김치전 1만 2,000원, 파전, 육전, 굴전은 각각 1만 5,000원이죠. 누룽지와 소면은 4,000원이고요. 장수막걸리는 주량과 관계없이 무료 제공하는데, 고객들이 중식 반주로 드시는 약주가 하루 평균 출잡아 4,000원짜리 막걸리 60병 정도에 이릅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인 매운 갈비찜, 도가니 수육은 4인용 중이 4만원, 대가 5만원으로 1인당 1만원 남짓하다. 특히 식단 메뉴가 나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별도의 안주 없이도 반주로 낚술을 적당히 즐길 수 있어 금상첨화다.

2월 셋째 주엔 본회 장석영 부회장, 안홍열 회우 등 7명이 찾아 중식을 들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지난달 말엔 이향숙 사무총장, 유자효 편집위원장 일행이 식사하고 카운터에서 계산할 때 소정민이 “유자효 선생님이지요! 반갑습니다”라고 해서 초면인 유 위원장이 미소로 답례했다.

“동아, 서울, 조선, 한국, 경향, 문화일보 전 현직 기자들, 신문협회, LG, 코오롱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 CEO들도 우리 집 단골이죠. 주변엔 우리보다 큰 식당이 더러 있는데, ‘음식이 정갈하다. 맛있다. 담백하다’며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더욱 정성을 다해 모시지요.”

개업 동기는 공무원인 남편이 박봉이라 가게를 보태려고 식당에 눈을 돌렸단다. 경북 안동 출신의 가정주부 권 사장은 전남 나주에 있는 60년 전통의 유명한 곰탕집을 6개월 동안 주말마다 찾아가 식당 일을 도와주며



〈소정민-권명옥 부부〉

종업원들은 '의형제 동행자'...고객을 가족처럼 받들어

견습하고 노하우를 습득한 뒤 개업했다. “식당 간판을 ‘나주곰탕’으로 달고자했더니 특허라서 쓸 수 없다기에 내 이름 석 자에 ‘가마솥’을 덧붙여 ‘권명옥 가마솥 나주곰탕’이라고 내 걸었지요.”라며 웃는다.

고객 중에 어르신은 ‘아버님’, 젊은 이는 ‘오빠’로 모시는 곳, 유향과 산양삼 잔뿌리와 줄기, 잎을 섞어 만든 사료로 키운 한우와 돼지고기를 6시간 이상 푹 고아 기름기를 99% 정도 빼 육수에 삶아 ‘황삼포크’로 제공하여 담백한 맛, 부드러운 미각, 고소한 향기를 안겨준다.

1남 2녀의 어머니 권 사장은 식당을 경영하면서 “아들과 큰딸을 미국 유학 보냈더니 공부를 마치고 워싱턴 D.C에서 직장인으로 활동한다”고 자랑한다. 권 사장은 “아침 9시 30분부터 점심식사준비를 합니다. 오전 11시 반쯤이면 200명 좌석이 꽉 차요. 2교대로 손님을 치르고 나면 오후 1시가 조금 넘지요.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휴식시간인데, 이 때

종업원들이 개인 일을 보려고 외출하거나 쉽니다.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야간 영업을 하는데 전보다 회식 모임이 많이 줄었어요. 그건 주52시간 근무에 주말 휴무제 탓인가 봐요. 우리 시대는 춘궁기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참 부지런히 일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라고 말한다.

카운터 담당 남편은 “우리 종업원들은 의형제 동행자라는 정신으로, 고객을 가족처럼 받들지요. 월 최저 봉급은 230만원, 최고 290만원이지



만 4대 보험을 들고 있어서 월 320만원 상당을 받는 셈이지요.”라고 밝힌다.

조선왕조 말기~대한제국 시절 광화문 사거리 주변, 정동 영국대사관 뒤편과 세종문화회관 뒷마당, 다동 거리는 장안 한옥마을에 딸감을 대주던 장작시장이었다.

특히 지금의 서울시청~프레스센터 뒷전엔 프랑스 상인 브라이상이 진출해 장작을 팔았다. 그런데 ‘양탕국’이라는 파곤한 커피를 담아 와서 인부들에게 주는 바람에 전통 차(茶)로 생계를 유지하던 다동 다모(茶母)들이 생업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반기를 들었다.

그 때 찾집은 오늘날처럼 일정한 장소, 독립된 공간에서 영업한 것이 아니라 장작시장 주변을 돌면서 다모들이 차를 끓여 팔던 곳, 지금 이 거리는 식당가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시와 그림으로 맞는 봄



전준엽 화백의 유화 <봄> 70cm x 50cm

춘신(春信)

유치환

꽃등인 양 창 앞에 한 그루 피어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 가지 새로
작은 멧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에서
작은 깃을 얹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느뇨.

앓았다 떠난 아름다운 그 자리에 여운 남아
뉘도 모를 한때를 아쉽게도 한들거리나니
꽃가지 그늘에서 그늘로 이어진 끝없이 작은 길이어.

어렵던 시절, 유리창에 금이 가면 어른들은 색이 있는 종이를 올려 금에 붙였습니다. 유리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나뭇가지에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것을 ‘꽃을 등인다’고 했습니다. 또는 ‘꽃 모양의 등불처럼’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한 그루 살구꽃 연분홍 그늘 가지 새로 작은 멧새 한 마리가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갑니다.

아, 이 작은 새는 어디서 그 무서운 겨울을 견뎌 살아냈을까요. 새가 앓았다 떠난 진동으로 가지가 한들거립니다. 시인의 눈에 새가 날아간 끝없이 작은 길이 보입니다. 이른 봄의 정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뽕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 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엄혹한 겨울을 살아 넘긴 생명들은 승리자들입니다. 인고(忍苦)의 시간 뒤에 만나는 봄은 하도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봄은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죽은 것 같던 나무가 움을 틔우고, 눈과 얼음이 녹은 대지가 꿈틀대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 기적의 힘이 하도 엄청나 입을 열어 외치지만 아무 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습니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봄니다. 먼데서 이기고 돌아온 황홀한 봄을……

이 시를 쓴 이성부 시인은 일간스포츠 부국장을 지낸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1960년대 대표적 참여 시인의 하나로 소박한 언어로 현실 인식이 짙은 시를 주로 창작했지요.

〈해설 : 明廣〉

퇴직 선배들의 현 KBS 상황에 대한 성명서

“방송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도구”

후배들이 마지막 체제 수호자 되어주기를...



방송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다.

최근 공영방송 KBS가 ‘오늘밤 김제동’에서 ‘백두청송위원회’ 김수근을 출연시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송한 문제를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제재 사유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고 선배 방송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남북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에서도 북에 대한 고무찬양을 금하고 있으며, 공공재인 방송과 관련된 방송법도 이 법 정신에 준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방송을 도구로 자유민주체제를 해체하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자신들이 야당일 때 여야간 합의로 약속한 사장 선임 제도를 뒤집고 정부 여당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었던 종전의 절차를 고수하여 이사회를 폭력적 방법으로 교체하고 현 사장을 임명했다.

놀라운 것은 민노총 소속인 KBS와 MBC 노조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정권에서 일한 사람들의 사상 검증 및 징계 등 초법적 행보를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8일

KBS를 걱정하는 퇴직 선배들의 모임

강동순(전 감사, 방송위원), 박용식(전 경영본부장), 박세호(전 스포츠국장), 박종권(전 심의부장), 배학철(전 보도본부장), 이석희(전 보도국장), 이장춘(전 전산국장), 이보길(전 홍보부장), 이재봉(전 순천국장), 이일로(전 기술본부장), 이정웅(전 보도제작국장), 안형환(전 기자, 국회의원), 전여옥(전 기자, 국회의원), 정종표(전 부산 보도국장), 황규환(전 라디오본부장)

또한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방송 등 언론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있으며 국가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진보 정권과는 다르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진보와 개혁이 아니라 연방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사실 우리 선배 방송인들도 재임 동안 독재권력 아래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지 못한 오류를 시인한다.

그러나 그때는 산업화 과정이라는 시대적 명제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 시대가 아닌가?

민주화 시대에 퇴행해가고 있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방관만 할 수 없어 선배들은 우려와 격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선배들도 KBS의 올바른 모습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공영방송제도 폐지 운동 등에 참여할 각오도 있다.

끝으로 후배 방송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구한말에 때를 놓친 뒤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장지연 선생이나 ‘매천야록’을 남긴 황현 선생처럼 뒤늦은 탄식을 할 수는 없다.

과거 일제와 싸우고 권위주의 정권과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한 언론 선배들의 자랑스런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봉장에 서야 할 때다.

어느 누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에 종사하는 방송인들이 마지막 체제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를 떠올리며 후배 방송인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회우가 낸 새 책

‘한국경제 도약시대’

곽찬호 지음

곽찬호 원로회우가 ‘한국경제 도약시대 (2018년 경제실상)’를 저술·발간했다.

곽 회우는 이 책에서 2018년은 격동의 한해였고 시장경제원리를 지키지 않아 실패는 태생적이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책에서 곽 회우는 2018년 한국경제를 문제별로 220편에 걸쳐 분석 평가하고 있다.

곽 회우는 지난 2015년부터 그해의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이 책자를 발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책이 네 번째 출간된 시리즈물이다.

경제통신 편집국장 겸 경향신문 편집위원을 거친 곽 회우는 93세의 고령에도 일본 섬유신문사 논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현역언론인이다.

262페이지, 新光社 발행, 정가 12,000원



‘지명직설(地名直說)’

오동환 지음

오동환 회우가 꼭 알아야 할 땅이름 뜻풀이를 한 ‘지명직설(地名直說)’을 출판했다. 오 회우는 ‘지명의 이름은 흥미롭다. 지구촌 구석구석 지명을 혼자만 알고 웃기에는 괜스레 미안해서 책으로 묶어 소개한다’고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 책에는 ‘한국 땅이름’, ‘똑같은 지명과 돌림지명’, ‘사람이름과 관련된 지명’, 한 글자지명, ‘길고 긴 지명’, ‘멋지고 아름다운 지명’, ‘별나고도 해괴한 지명’으로 분류하여 지명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명동(明洞)은 조선 초기 청계천 이남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촌을 명례방(明禮坊)이라 했는데 이것이 명동의 유래이고, 무교동(武橋洞)은 조선시대 무기를 만드는 군기시가 있어 무교동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292페이지 안나프르나 발행, 정가 18,000원

박기병 6·25참전언론인 회장 국가보훈처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협의



(사진 : 좌로부터 박기병 회장, 이병구 보훈처 차관,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관과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등을 협의했다.

이병구 차관은 이날 국가보훈처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한 6·25참전언론인회가 6·25전적지 답사와 보훈 선양 학술회의 그리고 6·25참전수기 출판 등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기병 회장은 특히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6·25참전수당의 공평한 조정 등을 건의하고, “6·25참전용사들의 참전수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엔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과 정운종 6·25참전언론인회 상임이사가 배석했다.

한편 박기병 회장은 전자랜드 홍보그룹 상임고문으로 7차 연임되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

언론가 소식

한국기자상 50년, 영광의 370편

한국기자협회가 1967년부터 매년 시상하는 한국기자상이 금년으로 50회를 맞았다. “뛰어난 보도 활동과 민주언론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자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제정”했다. 수상작 면면을 보면 그 시대의 사건 사고와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 탄압으로 두 번은 시상식을 못했다.

1회 수상작은 TBC의 이수근 판문점 탈출사건, 한국일보의 불국사 석가탑 파손, 동아일보의 김종필 탈당 특종이 차지했다.

80년대부터는 은폐된 진실의 고발 기사가 주류를 이뤘는데 19회 때 중앙일보의 박종철 고문치사가 그 본보기다. 그 외 특이한 점으로는 1971년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전체가 선거계몽 캠페인을 벌이며 부정추방과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서고 기자들의 자유결의문을 채택, 전국 14개 언론사가 잇따라 결의문을 선언하게 했다는 공로다.

공익신고자법 개정 반대

한국신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중 언론 관련 부분에 기사 내용과 제보자를 당국에 보고해야하도록 되어있어서 취재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 취재원 보고가 불가능하면 솔직한 취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노이 프레스센터 운영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2차 정상회담 취재 지원을 위해 2월 26일~3월 2일 하노이에 프레스센터를 운

영했다. 여기에는 250석의 기자석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를 상주시켜 취재를 도왔고, 이번 정상회담의 전망과 평가에 대해 학자들의 포럼도 개최했다. 지난 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도 프레스센터를 운영해 500명의 국내외 기자들의 취재를 지원했었다.

65%가 재난위기시 스마트폰 이용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재난이나 재해 등 위기를 당하면 TV 라디오 보다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겠다고 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문 방송 의존도보다 스마트폰을 애용하는 비율이 57.2%로 톱을 차지했다.

사우회 소식

KBS 신임 회장에 김광일 선출

1월 28일 사우회는 회장 및 감사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16대 회장에 김광일 부회장을, 감사에 윤홍식 최효섭 두 회우를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1966년 기술직으로 입사해서 중계기술국장까지 요직을 모두 거쳤다.

동아일보

독립 열망 쏟아낸 文士 기자들 조영

회보에 자랑스러운 회우 100인 중 4명의 문사를 소개했다. 암울한 일제 시대에 독립의 열망을 풀어낸 동아일보 기자들이다. 그들은 정인보, 민태원, 한기약, 심훈 등 작가 겸 기자들. 정인보는 설명이 불필요한 학자이며 문인이었는데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래의 작사가로 유명하다. 민태원은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수필 ‘청춘예찬’의 필자로 당시 문단의 유명한 작가였다.

연회비. 찬조금. 평생회비 납부 감사합니다

(2019. 1. 21~ 2019. 2. 20 납부)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찬조금

이정식 10만원

연회비

여구만(20), 성낙오(19), 심의표(19), 최상완(18, 19), 최선록(20), 윤홍섭(19), 윤주영(16), 정운택(17~19), 구자건(19), 송충섭(19), 최신희(19), 안홍렬(19), 홍순일(19), 김규문(19), 노철용(18), 이종기(19), 김한길(18~22), 유지호(19), 김태선(19), 연병해(19), 동문성(19), 이태자(19), 송영학(19), 장성원(19), 박교원(19)



구일회 회원 50만원 찬조

본회 원로 회우 친목 모임인 구일회(회장 곽찬호·사진)가 2월 20일 정기모임에서 회비를 아끼고 곽 회장이 보태 찬조금 50만원을 기탁했다. 회원은 강승훈, 계성일, 김용수, 김윤덕, 박영식, 박진서, 이병대, 조창화, 최대훈, 한영섭, 황대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호곤 회우 별세



김호곤 회우(전 조선일보 교열부)가 2월 4일 설날 하루 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1933년 생. 경기도 이천 출생으로 65년에 합동통신 교열부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한국교원기자회 창립 부회장을, 80년 언론 통폐합에 따라 연합통신 교열부로 옮겨 정년퇴직했다.

박영래 회우 별세



박영래 원로 회우가 3월 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2년 충남 태생으로 98세인 고인은 건국대 경제학과 졸업 후 51년부터 62년까지 대한통신 기자로 출발했다. 경제부 차장을 지낸 후 퇴사, 동방화학 전무이사로 전업한 후 금성운수 대표이사가 되면서 운수업을 시작, (주)영화상사 회장으로 은퇴했다. 고인은 임종 전 2월 7일 본회 발전에 써달라고 딸 박노옥씨를 통해 찬조금 100만원을 입금해주었고 그의 유지에 따라 유족들은 본회로부터 부의금도 사양했다.

본회 산악회 시산제

3월 21일 북한산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최귀조)는 3월 21일 기해년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북한산 향로봉 자락에서 갖는다. 불광역 2번 출구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 집합한 뒤 산행하여 11시에 시산제를 거행한다. 오찬 뒤풀이는 불광역 1번 출구 먹자골목 명태어장에서 갖는다.

경조사

◆결혼 : 이광영 아들 (2.16)

회우 동정

차인연합회 회장 연임



박권흠 회우(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국회의원)는 2월 21일 열린 (사)한국차인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연임됐다. 박 회우는 1992년에 취임하여 27년 동안 재임하면서 한국차인연합회를 크게 발전시켜 회원 차회 1100개를 동원, 전국민 차(茶) 마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월간 **대한언론**

- | | |
|---|-----|
| · 발행인 겸 편집인 | 李炳大 |
|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 李享淑 |
| · 편집위원장 | 柳子孝 |
| · 주 필 | 朴錫興 |
| · 편집국장 | 崔命宇 |
| · 교열국장 | 俞漢俊 |
| · 광고국장 | 金祖永 |
|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
| · Email : kjc1405@hanmail.net | |
|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 · ☎ 02)732-4797/4798 02)2001-7621 | |
| · Fax 02)730-1270 | |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 전자랜드

순수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토종 기업 전자랜드는 레저스포츠, 철강, 농구단, 용접재료 등
국내, 외 8개 계열사 및 관계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이스킹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전국 120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전 양판점



전자랜드
POWER CENTER

용산 전자랜드파워센터
국내 최대
프리미엄 가전매장



TWIN DOVES
GOLF CLUB

트윈도브스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동남아 최고의 골프장



REGUSCREST
GOLF CLUB

리저스 크레스트 골프 클럽
일본 명문 골프 클럽으로 고품질로 지어진
 챔피언십 18코스 2곳을 운영하는 일본 Top100 골프클럽



Sanda
SVS Golf Resort

산다골프클럽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골프클럽으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대중적인 골프장

SYS홀딩스(주)



SYS홀딩스(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최대 규모 전자상가 운영 기업



전자랜드 엘리펀츠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선사하는 프로농구단



고려제강

전세계 70여개국으로 수출하고있는
세계 최고 경쟁력의 특수 선재 기업



KISWEL
고려용접봉

고려용접봉

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용접재료 생산 일류 기업



高麗熱鍊(株)

고려열연(주)

고주파 유도 가열방식의 신기술을
갖춘 PC강봉 제품의 선두기업

SAMSUNG

9 9 . 9 9 **9** %

이것이 일반 청정과
초순도 청정의 차이

삼성 큐브,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필터로
무결점에 가까운 청정을 실현하다

초순도 공기청정기

삼성큐브



"미세먼지 99.999% 제거"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의 0.3 μ m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의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시험 입자: 0.3 μ m KCl 입자, 풍속: 1.0 m/s).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이며,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